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5. 7.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목 차

I. 감사의 목적	1
II. 감사기간	1
III. 감사실시 대상기관	2
IV. 감사실시 경과	4
V. 감사실시 주요내용	11
1. 행정안전부	11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5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0
4. 인사혁신처	43
5. 경찰청	50
6. 소방청	64
7. 지방자치단체	71
가. 서울특별시	71
나. 부산광역시	81
다. 광주광역시	88
라. 울산광역시	98
마. 경기도	105
바. 충청북도	108
사. 전라남도	110
아. 경상북도	114
자. 제주특별자치도	117
8. 공공기관	124
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24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24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25
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25
마. 공무원연금공단	125
바. 한국도로교통공단	126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27
9. 본회의승인대상기관	128
가. 서울경찰청	128
나. 부산경찰청	131
다. 광주경찰청	133
라. 울산경찰청	136
마. 경기남부경찰청	139
바. 경기북부경찰청	142
사. 충청북도경찰청	143
아. 전라남도경찰청	146
자. 경상북도경찰청	150
차. 제주경찰청	151
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156
타. 새마을운동중앙회	156
파. 한국자유총연맹	156
10. 업무현황보고서 제출요구기관	157
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7
VI.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8
1. 행정안전부	158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6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80
4. 인사혁신처	182

5. 경찰청	185
6. 소방청	196
7. 지방자치단체	198
가. 서울특별시	198
나. 부산광역시	201
다. 광주광역시	205
라. 울산광역시	210
마. 경기도	211
바. 충청북도	216
사. 전라남도	219
아. 경상북도	221
자. 제주특별자치도	222
8. 공공기관	227
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27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27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27
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28
마. 공무원연금공단	228
바. 한국도로교통공단	228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28
9. 본회의승인대상기관	229
가. 서울경찰청	229
나. 부산경찰청	232
다. 광주경찰청	234
라. 울산경찰청	237
마. 경기남부경찰청	239

바. 경기북부경찰청	242
사. 충청북도경찰청	243
아. 전라남도경찰청	246
자. 경상북도경찰청	250
차. 제주경찰청	251
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255
타. 새마을운동중앙회	255
파. 한국자유총연맹	255
VII. 증인 및 참고인 현황	256
1. 기관증인	256
가. 기관증인 총괄	256
나.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258
2. 일반증인 · 참고인	259
가. 일반증인 · 참고인 총괄	259
나. 일반증인 · 참고인 출석 현황	261
다. 일반증인 · 참고인 철회 현황	267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5. 7. .

행정안전위원장

I.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2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입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II. 감사기간

2024. 10. 7.(월) ~ 2024. 10. 25.(금) [19일간]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

- 1) 행정안전부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4) 인사혁신처
- 5) 경찰청
- 6) 소방청
- 7) 지방자치단체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광주광역시
 - ④ 울산광역시
 - ⑤ 경기도
 - ⑥ 충청북도
 - ⑦ 전라남도
 - ⑧ 경상북도
 - ⑨ 제주특별자치도
- 8) 공공기관
 - 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②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③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④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⑤ 공무원연금공단
 - ⑥ 한국도로교통공단
 - ⑦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나.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 ① 서울경찰청
- ② 부산경찰청
- ③ 광주경찰청
- ④ 울산경찰청
- ⑤ 경기남부경찰청
- ⑥ 경기북부경찰청
- ⑦ 충청북도경찰청
- ⑧ 전라남도경찰청
- ⑨ 경상북도경찰청
- ⑩ 제주경찰청
- ⑪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⑫ 새마을운동중앙회
- ⑬ 한국자유총연맹

다. 업무현황보고서 제출요구기관 (주무부처 국감 시 기관장 배석)

1) 행정안전부 산하

- | | |
|-------------|-------------|
| 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②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 ③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④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⑤ 지방공기업평가원 | ⑥ 한국섬진흥원 |
| ⑦ 한국지방세연구원 | |

2) 경찰청 산하

- | | |
|---------|--------------|
| ① 경찰공제회 | ②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

3) 소방청 산하

- | | |
|------------|------------|
| ① 한국소방안전원 | ② 대한소방공제회 |
| ③ 소방산업공제조합 | ④ 한국소방시설협회 |

Ⅳ. 감사실시 경과

1.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 위원장, △ 간사

대 상 기 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직 원	
행정안전부	○ 신정훈 위원장 (민)	△ 윤건영 위원 (민)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성희 위원 (민)	전문위원	조문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모경중 위원 (민)	전문위원	서기영
인사혁신처		박정현 위원 (민)	행정실장	황준연
경찰청		양부남 위원 (민)	입법조사관	황지현
소방청		위성곤 위원 (민)	"	윤여문
서울특별시		이광희 위원 (민)	"	김현우
경기도		이상식 위원 (민)	"	전성민
제주특별자치도		이해식 위원 (민)	"	민성철
서울경찰청		채현일 위원 (민)	"	이영주
경기남부경찰청		한병도 위원 (민)	"	최영표
경기북부경찰청		△ 조은희 위원 (국)	"	김형래
제주경찰청		김상욱 위원 (국)	"	이재승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종양 위원 (국)	"	신강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배준영 위원 (국)	"	구진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달희 위원 (국)	행 정 관	김동길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이성권 위원 (국)	"	박철환
공무원연금공단		정동만 위원 (국)	주 무 관	백승운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승환 위원 (국)	"	조예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춘생 위원 (조)	"	이화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용혜인 위원 (기)	"	김문주
새마을운동중앙회			"	이현진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연구위원	3인
			위원보좌진	22인
			의정기록과 직원	5인

나. 지방감사반

1) 10월 17일 (목)

① 지방 1반 : 충청북도/충청북도경찰청 대상

구분	구성	
감사반장	신정훈 위원장 (민)	
감사위원	양부남 위원 (민)	김상욱 위원 (국)
	위성곤 위원 (민)	김종양 위원 (국)
감사위원	이광희 위원 (민)	배준영 위원 (국)
	채현일 위원 (민)	정동만 위원 (국)
사무보조직원	한병도 위원 (민)	용혜인 위원 (기)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등 행안위 직원 10인 정책연구위원 2인 위원 보좌진 11인 의정기록과 직원 3인	

② 지방 2반 : 경상북도/경상북도경찰청 대상

구분	구성	
감사반장	조은희 위원 (국)	
감사위원	윤건영 위원 (민)	이달희 위원 (국)
	김성희 위원 (민)	이성권 위원 (국)
감사위원	모경종 위원 (민)	조승환 위원 (국)
	박정현 위원 (민)	정춘생 위원 (조)
사무보조직원	이상식 위원 (민)	
	이해식 위원 (민)	
사무보조직원	조문상 전문위원 등 행안위 직원 8인 정책연구위원 2인 위원 보좌진 11인 의정기록과 직원 3인	

2) 10월 21일 (월)

① 지방 1반 : 전라남도/전라남도경찰청 대상

구분	구성	
감사반장	신정훈 위원장 (민)	
감사위원	양부남 위원 (민)	김종양 위원 (국)
	위성곤 위원 (민)	배준영 위원 (국)
	이광희 위원 (민)	이달희 위원 (국)
	채현일 위원 (민)	정동만 위원 (국)
	한병도 위원 (민)	용혜인 위원 (기)
사무보조직원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등 행안위 직원 10인 정책연구위원 2인 위원 보좌진 11인 의정기록과 직원 3인	

② 지방 2반 : 울산광역시/울산경찰청 대상

구분	구성	
감사반장	조은희 위원 (국)	
감사위원	윤건영 위원 (민)	김상욱 위원 (국)
	김성희 위원 (민)	이성권 위원 (국)
	모경종 위원 (민)	조승환 위원 (국)
	박정현 위원 (민)	정춘생 위원 (조)
	이상식 위원 (민)	
	이해식 위원 (민)	
사무보조직원	조문상 전문위원 등 행안위 직원 8인 정책연구위원 2인 위원 보좌진 11인 의정기록과 직원 3인	

3) 10월 22일 (화)

① 지방 1반 : 광주광역시 / 광주경찰청 대상

구분	구성	
감사반장	신정훈 위원장 (민)	
감사위원	양부남 위원 (민) 위성곤 위원 (민) 이광희 위원 (민) 채현일 위원 (민) 한병도 위원 (민)	김상욱 위원 (국) 김종양 위원 (국) 배준영 위원 (국) 이달희 위원 (국)
		용혜인 위원 (기)
사무보조직원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등 행안위 직원 10인 정책연구위원 2인 위원 보좌진 11인 의정기록과 직원 3인	

② 지방 2반 : 부산광역시 / 부산경찰청 대상

구분	구성	
감사반장	조은희 위원 (국)	
감사위원	윤건영 위원 (민) 김성희 위원 (민) 모경종 위원 (민) 박정현 위원 (민) 이상식 위원 (민) 이해식 위원 (민)	이성권 위원 (국) 정동만 위원 (국) 조승환 위원 (국)
		정춘생 위원 (조)
사무보조직원	조문상 전문위원 등 행안위 직원 8인 정책연구위원 2인 위원 보좌진 11인 의정기록과 직원 3인	

2. 감사 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시간 (출석/재적)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0.7. (월)	10:22~01:56 (22/22)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국회	
10.10. (목)	10:18~23:04 (22/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회	
10.11. (금)	10:04~20:34 (22/22)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	
10.14. (월)	10:15~18:39 (22/22)	경기도청	경기도청	
	20:03~22:17 (21/22)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10.15. (화)	10:13~19:40 (22/2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21:10~01:13 (21/22)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일 자	감사시간 (출석/재적)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0.17. (목)	10:12~13:32 (11/11)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지방1반
		현장시찰	공평2지하차도 등	
	16:03~17:37 (11/11)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10:04~12:26 (11/11)	경상북도	경상북도	지방2반
	14:10~15:29 (10/11)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10.21. (월)	10:08~13:18 (11/11)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지방1반
	14:33~16:04 (11/11)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10:10~13:10 (11/1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지방2반
	15:02~16:23 (11/11)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10.22. (화)	10:02~13:02 (11/1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지방1반
	14:44~16:06 (11/11)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10:00~12:56 (11/1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지방2반
	15:00~16:20 (11/11)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일 자	감사시간 (출석/재적)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0.23. (수)	10:24~15:14 (2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15:30~17:21 (19/22)	제주경찰청	제주도청	
10.24. (목)		현장시찰	인천공항본부세관	
10.25. (목)	10:06~23:02 (22/22)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국회	

V. 감사실시 주요내용

1. 행정안전부

【대변인】

【기획조정실】

【의정관】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 대상자로 추천한 인사에 대해 외교부가 이의를 제기하여 서훈 수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

【감사관】

-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사찰에 대한 추가적인 독립조사를 반드시 추진할 것

【인사기획관】

【운영지원과】

【디지털정부혁신실】

-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인 정부24 제공 정부·지자체 누리집 안내 오류 문제 지적
- 전자정부 서비스 중단 및 오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대행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의 전문성과 효과에 의문이 있는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 대한 지속적 평가 및 검토 필요
- 정보 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행정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 공공마이데이터 제도의 활용도 확대를 위해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가 자주 개최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묶음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 AI 관련 사업이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어 사업 간 호환이 어렵고 중복 개발의 소지 등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AI 공통기반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재직 5년 이하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대상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 설문조사 실시 후 미발표에 대한 문제점 지적

【조직국】

- 지방경찰청과 소방본부 간 직급 균형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및 직무대행자의 직급 상향 필요

- 인천과 경기 북부는 인구수와 소방 출동 건수가 많고 경북소방본부는 관할 지역이 넓으므로 해당 지역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적극 추진 필요
- 실화재 훈련 성과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훈련 교관을 확충하고 선진적인 화재진압 기술에 대한 전문 확대 필요
- 등록외국인 수, 관할구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대·개편 필요
- 부산항 북항재개발 통합추진단 사례를 고려하여 인천항에도 내항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필요
- 비교과 교사 법정정원 확충 필요
-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상승을 위해 직렬 간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한 상위직급 정원 확대 필요

【경찰국】

- 경찰국 신설 후 국민 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
- 경찰의 물리력 사용 증가 현상에 대한 지적
- 행정안전부장관의 방첩사령부 방문 관련
 - 방첩사령부 방문의 부적절성에 관한 지적

- 방첩사령부 방문은 대공수사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 목적이었다는 질의
-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권 장악 시도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
- 신설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위해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
- 신설 국정과제 111번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 과제가 담보 상태에 있으며 관련 제도개선안을 더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

【지방행정국】

-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단체들이 기부금을 정치운동에 활용하고 있으나 활동자금을 확인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
- 통일문화연합 및 선한시민의힘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정신적 손해도 신체적 상해로 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여순사건실무위원회 요청 이후에 여순사건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한 비율이 저조하고(6.3%에 불과), 여순사건위원회의 회의 대부분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 법정시한 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우키시마호 폭발사고 관련 일본 정부의 사과 및 공개된 명부 외에 나머지 명부 조속히 확보 필요
- 조세이탄광 관련 유해 발굴과 봉환에 대한 정부의 관심 필요
-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했어야 했다는 지적
-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에 있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1.88%로 법정 권고율 3.8%에 미달한다는 지적
-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 계획
-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치 개입 정황에 대한 장관의 입장
-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자유회관은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보수 및 보강 대책을 마련할 필요

【자치분권국】

-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우리나라를 다극체제로 전환하려는 첫 시도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맞닿아 있는 사항이므로 중재 노력, 권한 이양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조속히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한 이양 등에 대해 노력할 필요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와 같이 분구 등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 통합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와 같이 기존의 구를 나누어서 새로운 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청사건립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의 필요함
- 창원시에 대한 자율통합지원금이 2025년에 일몰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통합금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
- 농촌지역의 3~4개의 동을 합쳐서 읍으로 환원하는 사안과 관련된 지적
-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지적
-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한 읍·면·동 장의 주민직선 및 지방의회의원의 신분보장 필요성에 대한 지적
-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재배치가 아닌 재난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인원 충원 필요성에 관한 지적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부서를 방재안전직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성 및 재난안전부서 내 정원의 방재안전직 단수직 또는 복수직 전환 필요성에 관한 지적
-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공개 및 겸직심사위원회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

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취지에 관한 지적

- 6~7급 및 재직기간 6~15년의 중간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처우 개선책에 관한 지적
- 기준인건비 패널티 제도 재도입 이유 및 자율운영범위 제도 미도입에 관한 지적
- 행안부 차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준수를 담은 지침이나 공문 시행 필요성에 관한 지적
- 38년간 동결된 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상향조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
- 소방역할 변화에 따른 국가·지방간 합리적 소방사무 재분배 및 소방청장으로 인사권 일원화 필요성에 관한 지적
- 소방 분야 인력 부족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고려하여 소방인력 증원 필요
- 소방본부의 인원,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과 과장급 사이 중간 직위 도입 필요
- ‘제주형 기초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설치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례로 지방정부에게 어떠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

- 지방자치, 주민자치 인식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인 ‘새로운 민심 새민연’이 설립 목적과 달리 정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필요

【균형발전지원국】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 현금성 지원사업(시범사업) 지원 등 기금 배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목표 관리제’ 등 실행행위를 상향할 방안 마련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의료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시설 건립 및 의료인력 유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일부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이 적절해 보이지 않으며, 기금 투자 기준 정비 필요
- 난임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활용 허용 적극 검토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형평성 있는 평가기준 마련과 배분 격차 완화를 위해 균등배분을 기초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모범적 사례를 홍보해서 인구감소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 분석을 위한 표준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

- 지방소멸과 관련된 진단 통계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표준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관련

-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재정사업 영역과 SOC민간투자 영역 사이에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민간영역 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지역소멸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수시 설명회 개최 및 장려 필요
- 사업성 좋은 특정 지역의 프로젝트 선정보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대응을 1순위로 두고 심의 필요
- 장기 프로젝트, 민간 투자 등 업무의 특성상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보상 필요

○ 마을기업 관련

- 마을기업 신규 지정 사업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등 마을기업 사업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 마을기업 예산 대폭 삭감으로 예비마을기업이 신규마을기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지정 취소되고 있음. 마을기업 성장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취소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24년도에 취소된 예비마을기업에 유예기간을 연장 소급 적용하는 등 조치 필요
- 2025년에는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재개하고 마을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안산시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이후 운영 및 활용계획에 대한 질의

○ 남해안 및 섬 특화개발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대표발의) 개정 필요

- 섬 특화 개발을 위하여 타법을 준용한 특례조항 신설, 섬 개발 시 허가 등 의제조항 도입, 섬 주민의 교통권을 위해 사용되는 지자체 사무수행용 선박의 건조 등의 비용 국가 지원 등 신설

○ 백령항로 대형여객선의 건조비와 운영비 지원이 필요

○ 웅진군 북도면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국비 지원 필요

○ 故 서정우 하사 전사지 안보 소공원 조성 예산 반영 필요

○ 빈집 통계가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조사 시점이 다른 문제가 있음.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빈집 정비 관련 범정부 TF를 운영중인 만큼 빈집 정비를 위한 객관적인 통계 마련 필요

-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적발건수 없음)과 비상벨 설치율(전체 대비 27%, 의무 대비 76%)이 미흡한 실정으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적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
- 남성 육아 지원을 위해 남자화장실 내에 기저귀 교환대,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시설 확충 필요
- 한국섬진흥원장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데, 면접이 완료되었음에도 결과 발표가 안되고 있음. 인사검증 단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섬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높은 도덕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사가 임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고향사랑기부금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기부 절차가 복잡하므로 플랫폼을 다변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
- 고향사랑기부금의 오프라인 기부 시 답례품 선택과 기부가 단일 창구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필요
-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현재 재해구호 목적의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는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 고향사랑기부금 플랫폼 구축·운영 주체가 지역정보개발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운영상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민간 참여가 배제되어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

-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민간 플랫폼 허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행사는 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행사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
- 민간플랫폼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 유지보수비를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민간플랫폼 개방 계획을 지역정보개발원과 수립하는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 참여가 저조한 원인 및 제도 개선방안
- 고향사랑e음 유지비를 지자체가 부담하여 지자체장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정보시스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
- 고향사랑기부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시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등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
- 고향사랑e음 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
- 2024년 내 고향사랑기부금 민간플랫폼 개방 서비스 개통에 집중하기보다 2025년 상반기 안정적인 서비스 개통을 모색할 필요

【지방재정경제실】

- 국비 예산 지원 없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사업의 시행을 지시한 것에 대한 지적
-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의 기관별 격차, 인상률 예외 적용 등에 대한 질의
- 서울특별시 TBS 출연기관 해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
-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기존에는 착한가격 메뉴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었으나 현재에는 1개 메뉴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하이면 기준을 통과), 착한가격업소 정책의 물가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착한가격업소 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수립할 필요에 대한 질의, 착한 가격업소 제도의 목적인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이용자인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착한가격업소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2018년 24조 5,422억원에서 2022년 38조 2,756억원으로 56% 증가했는데, 지방세수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 한 지방채무는 갈수록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최근 5회계연도(2018~2022)의 지방자치단체 이·불용액이 294조원으로 이·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원인에는 결산검사위원 194인의 결산 검사 역량이 고르지 않다는 점과 결산심사에 할당된 시간 및 지원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등 결산검사가 취약한 점이 있다는 지적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서 개산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아직 실시하지 않은 회의, 행사, 회식비 등을 사실상 미리 당겨서 결제하는 업무추진비의 개산급 적극 활용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편법을 조장한다는 지적
-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획재정부가 균특회계 예산 약 300억원을 배정하고 있지만, 신속집행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지방재정 신속 집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실공사 또는 공사 지연의 우려가 크고, 부실공사 등의 책임은 일선 공무원이 지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151조 7,952억원)의 21.9%가 세외수입(332조 2,245억원)이지만,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84.4%로 지방세 징수율인 96.5% 보다 낮아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미징수액 중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이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으로 ‘당해연도 이전에 부과한 세외수입 중 당해연도에 징수한 세외수입’ 과목의 징수율이 최근 5개년간 2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 및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관리 방안과 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
-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의 장기 미징수 문제가 심각한데, 담당 공무원은 미징수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감사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징수절차를 연장하는 등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 최근 5년간 개별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특례 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액은

1.4조원(243,100건)에 달하고, 개별 법률을 통한 공유재산 특례는 지방자치권 및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정부의 동의와 예측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 사업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중 다액의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에는 공모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진행이 지체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는 지적
- 지방계약법령 상 지역중소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된 지역제한입찰의 기준금액은 2009년에 종합건설공사 100억원 미만(전문건설공사 10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15년이 경과했으나 변경되지 않았고, 건설공사비 지수가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종합건설공사 150억원 미만(전문건설공사 13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및 동 규정의 개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 고양시청이 일부 부서(재산관리과 등 4개 부서)를 백석으로 이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규정된 청사면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및 청사면적 기준 위반 시 위반 내용의 공시 외에 다른 제재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사업비 약 2,000억원)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나 서울특별시장과

영등포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업 대상지역이 문래동에서 여의도동으로 변경되고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으므로, 중앙투자심사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공공요금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1.23배에서 12.4배까지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행정서비스 이용 수수료에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지적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계획과 기능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
-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가 선수금을 투자금으로 유용한 사례를 비롯해 허위가맹점·상품권깡 등 지역화폐 발행·유통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관리체계 마련 촉구
- 지역화폐 효과 불투명한 가운데 국민세금 통한 지역화폐 국세 의무지원법 필요성에 의문 제기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재난문자의 경우 중복·반복 발송 방지에 관한 교육 내용 강화 검토 필요

【안전감찰담당관】

【안전예방정책실】

- 소방안전교부세 전체 재원 확대, 소방 재원 배분 비율 제고 및 안정화에 관한 질의
- 재난문자의 경우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중복·반복

발송 방지 방안 검토 필요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출연금 보조 검토 필요
- 승강기 부실점검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종합정보망을 새롭게 점검하고, 점검 기준 조정 및 처벌 강화 검토 필요
- 신축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최신 안전기준이 아닌 과거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 및 소방활동을 위한 비상통화 시스템이 승강기에 탑재되지 않고 있는 문제 개선 필요
-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관련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정비 필요
- 소방용품을 재난안전제품 인증하는 경우 소방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 필요
-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최저가 낙찰 관행 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최저가 입찰로 인해 표준유지관리비 공표제도 실효성이 전무하므로 적정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업체 관리감독 강화 검토 필요
- 보행자우선도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주도적인 역할하여 안전 기준 설정 및 관리할 필요
- 행정안전부 차원의 세월호 참사 재난 피해자 및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것

【자연재난실】

- 반지하 가구 대상의 침수방지시설이 전국 10곳 중 4곳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데, 일부 집주인들의 설치 거부상황 개선을 위해 설치지원 시설을 다각화하는 등 노력할 필요
- 재난대응활동계획은 2019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 지침은 2014년에 작성된 이후 개정이 안 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재난대응활동계획에 SNS를 통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 방지 등 2차 피해 방지 기능 추가 필요

【사회재난실】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 필요
- 인파관리 매뉴얼 완성이 지연되는 문제 지적
- 의사 집단행동 관련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의
- 독립조사기구로서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것

【재난복구지원국】

- 사회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과제 추진 검토 필요

- 취약계층의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재해취약지역 보험 가입 대상에 반지하 가구를 추가하고, 보험료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
- 침수흔적확인서 발급율이 거의 0%라는 지적

【비상대비정책국】

- 북한 오물풍선, 대남 소음방송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도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 영세한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
- 대통령 관저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므로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많은 공사를 실시한 21그램은 상식적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의 계약 상대방에서 배제되어야 했다는 지적
-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계약 전에 21그램의 역량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자격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질의
- 대통령 관저 공사 1차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견적서에는 주거동 일부를

증축하고 구조 보강 공사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21그램은 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로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었다는 지적

- 21그램이 섭외한 원담종합건설(제주도 소재)은 에스오이디자인(실내건축 공사업)에 건설업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
- 21그램은 견적서에 예산을 41억원으로 기재했지만 12억원에 계약이 체결 되었는데 이는 전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96억원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준공 당시 금액이 35.8억원으로 상승했고 행정안전부는 필요 공사비 20억원으로 여러 곳에서 전용했다는 지적
- 대통령 관저 공사는 처음부터 공사 내역을 반영한 설계도면이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준공검사를 할 수 없었고 실제 공사 내역이 반영된 준공도면도 없었으며, 실제 공사 내역이 반영된 준공도면이 작성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 35억원이 실제 소요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
- 언론보도와 같이 대통령 관저 증축된 14평 부분이 사우나, 드레스룸인 경우 국가의 재정을 이곳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 대통령 관저 공사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관저 보수공사의 예산 확보 및 계약 체결 전에 공사를 착수 했다는 지적
- 대통령 관저 공사 이행 과정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18곳 중 15곳이 무자격 업체였는데 이에 대한 공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
-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 70페이지 각주에 따르면 비서실과 행안부 등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을 시공·설계업체로부터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방법에 따른 준공처리가 어려웠는데도, “공사설계도서, 품질 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준공검사 조서에 서명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

- 준공 이후 공사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된 준공도면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기존 준공도면과 공사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된 준공도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
- 대통령 관저 공사의 준공도면에 대한 열람이 필요하다는 지적
- 대통령 관저 공사의 준공검사 진행 과정에 대한 질의
- 대통령비서실이 행정안전부에 발송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 12명의 전문가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공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대통령 관저 공사에 대해 전문가 12명이 확인한 「국가계약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조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
-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관저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축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 형법 등 법령 7개에 대해 12개의 위반 사실이 있다는 지적
-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을 한 21그램, 에이노마드 건축사 사무소, 원담종합건설, 에스오이디자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질의

-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한 질의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의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
-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업체의 선정이 법률상, 관행상 문제가 없는 수의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 대통령실은 국가 고도의 보안시설에 해당하고 동 시설에 대한 공사의 경우 보안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역대 정권들이 대통령 취임 후 관저에 들어갈 때 리모델링 공사를 해 왔지만 그 공사와 관련된 도면 및 공사와 관련된 계약관계를 대외적으로 공개 하거나 제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집무실 이전 공사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계약 후 공사비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 3.2억원을 과다지급했고,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 검증 및 하도급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대전 서구에 신설된 대전지방합동청사로 2029년 이전하는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현재 소재지(대전 동구 계족로 447)인 대전 원도심 지역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
- 행안부 공무원 정년연장 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필요
-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및 필요시 행정

안전부의 수사의뢰 등 신뢰 회복 노력 필요

- 대통령 관저 공사가 결과적으로 다수 현행법률을 위반하였고 대통령 영부인의 측근들에게 공사계약을 몰아주게 된 것에 대한 지적

【이북5도위원회】

-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가 지난 10년간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 점검할 필요
-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가 부적격 업체와의 비정상적인 수의계약으로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한 사실에 대해 지적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배우자가 받은 디올백의 소유권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지 여부
-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물 생산 현황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
- 대통령배우자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제주도에서 연간 200건 이상의 부검이 시행되지만 도내 법의관이 없어 출장부검으로 사인을 밝히고 있고, 요일에 따라서는 일주일의 기다려

부검하고 장례까지 최대 10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지적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제주출장소를 승격하여 제주분원을 설립하는 방안, 제주도에서 부검이 지연되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및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 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재정부, 제주대학교 등 기관과의 협력 계획에 대한 질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가융합망 사업 관련

- 국가융합망에 수용된 공공기관의 통신서비스 장애 사태 발생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인 질의
- 통신망 사고에 취약한 구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대책 및 개선 방안 질의
- 행정안전부에 전담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확충하여 운영할 필요
- 국가융합망 차기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타】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 및 제도 개선 필요
-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도나 신뢰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및 고발 의무에 대한 지적
- 정당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보전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경우, 정당이 해당 보전금을 반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회수하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 필요
-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중 16명을 선관위 출신으로 임명하며 상임위원직을 독식하고 있는 관행문제 및 외부인사 임명을 허용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규정과 상충되는 시행규칙 개선 필요
-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책임 지적
-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임기 및 자문 업무 관련 공정성 강화 필요
-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액수가 약 190억원에 달하므로 더욱 철저한 환수와 미납자 공개 등 제도 개선 필요
- 임박한 재보궐선거에 대비하여 사전투표소 불법촬영장비 설치 등 부정

선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선거관리 당부

-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 의뢰나 단속보다 사전에 선거법에 대한 안내와 지도가 우선될 필요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한 명이 안내와 지도, 수사와 고발을 모두 담당하는 조직 및 구조 개선 필요
- 사전투표에 있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투표소 부근 반경 100m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필요
- 명태균씨의 여론조사와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지적
- 제1심은 공소 제기부터 6개월 내에, 제2·3심은 전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원 외에 선관위 차원의 촉구 노력 필요
-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관위가 후보를 한 명만 초청해 대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 요청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가 미온적이며 강력한 제재 필요
-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조직·인사 개선

추진기구에 외부 자문위원 포함 필요

-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와 인터넷 심의위원회, 방송토론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의 공정성 강화 필요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겸직허가 실태조사 관련 규정의 도입과 직원들에 대한 겸직현황 조사 필요
-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사 교대 주기 단축과 선거 제도 및 고발 절차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필요
- 공직선거 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필요
- 선거공보 및 벽보 홍보물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 진위여부의 확인과 위반사항은 즉각적인 시정 조치 필요
- 많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직전에 휴직을 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개방직화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 필요
-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거비용 보전금이 35억 3,8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조치 필요
- 명예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출무수당과 안전검토수당을 지급

하면서 월정액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하는 문제점 지적

- 일부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선거여론조사의 품질과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론조사 세부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
-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제도 개선 필요
-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자진 사퇴함으로써 발생하는 재보궐선거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할 때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선거관리위원회 국외 출장 전수조사 결과 대다수가 외유성 출장으로 보이므로 국외출장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동일한 기부행위 사안에 대해 법 적용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관련,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대 필요
-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원 상당을 기부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했다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대가를 받고 공천을 주었다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1국장이 마스크를 쓰고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시정 필요
- 조사1국장의 채용 시 자기소개서 미제출에 대한 지적
- 함평에서 벌어진 군경의 민간인 희생 사건 관련 특정인에 대한 사건 보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한국전쟁 중 진도면에서 민간인이 재판 없이 군경에 의해 처형되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했다는 사실, 적법한 재판절차 없이 사살되었다는 사실, 진화위가 과거 경찰기록에 ‘암살대원’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진실규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부당함 지적
- 유해발굴 사업에 동일 업체가 계속해서 낙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진실규명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가 유해발굴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 진실규명사건을 왜곡하고 있는 조사1국장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표현 자제 필요
- 현 위원장 재임 시 전임 위원장에 비해 퇴직 인원이 증가하였다는 의견

- 현 위원장의 과거 과거사 관련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
- 1기에 비해 진실규명률이 하락, 각하율은 증가하고 특히 민간인 집단 학살에 있어서의 진실규명률은 하락폭이 크다는 의견
- 과거사 사건에 대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편향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
- 조사1국장의 태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
- 김광동 위원장은 조사1국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안면노출 거절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나 징계를 하지 않고 시간끌기 하고 있다는 지적
- 5·18에 대한 위원장의 왜곡된 인식에 대한 지적
- 5·18에 대한 위원장의 왜곡된 인식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 2023년 11월에 진실규명이 결정된 백락정씨를 부역자로 언급한 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의 자세와 역사관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
- 조사1국장과 운영지원담당관실 서무팀은 위원회 조사 등 업무추진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를 명기하여 진화위 명의로 진화위 소재 건물 관리 사무소에 CCTV 열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조사1국의 처리 실적이 목표 대비 63.1%로 저조하다는 지적

- 조사1국장이 남은 사건 5,500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각하, 불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
-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사건처리가 부진하다는 지적
- 위원장 취임 이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언론 정정보도 요청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을 했다는 지적

4.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유튜브 활동을 통한 정치편향적 발언 및 인재개발원 콘텐츠의 개인 유튜브 영상물 활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국정철학의 이해 교육과정 관련 정치편향적 인사의 강사 섭외 등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

【인재채용국】

- 현행 경력채용 제도가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공정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예산에 맞는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지방공무원 보건직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
- 공무원 실무수습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수당 지급 의무화 등 지급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인사혁신국】

- MZ세대 젊은 공직자의 이직률이 높고 지원자가 감소하는 등 공직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바, 공직사회의 혁신을 통해 공직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등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근무시간의 변경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개방형직위 감소 및 자율 직위 확대를 감안하여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임용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면접시험 및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법령상의 복무의무 준수 및 공개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복무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적격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정직 고위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
- 개방형직위, 국민추천제, 정부 헤드헌팅 등 민간인재 발굴 제도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
-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승진 부담을 완화하고 보수 및 연금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계급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우정직 공무원을 우체국장 및 과장·실장 직위에 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 직급에 우정서기관을 신설하고 일반직 공무원에 맞추어 직급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대우공무원제도·근속승진제도 적용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 직위군 구분에 이력 또는 경력 포함 등 전문경력관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6·7급 및 재직기간 6~15년의 중간연차 공무원이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들 중간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 퇴직 전 저축연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결원으로 보고 충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인사관리국】

- 연공서열에 의한 호봉제, 순환보직 중심의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되는 바, 채용 단계에서부터 직무급제를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대비 상향 조정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 공무원 보수를 정률제로 인상하는 방안에서 탈피하여 정액제로 변경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을 고용노동부의 6+6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보건교사 교직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영양교사를 포함시키고 금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약무직공무원에 대한 의약품안전관리 가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
- 소방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공무원 KTX 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
- 검사의 직급 및 보수에 있어 처우와 예우가 과도하다는 지적
- 중장기적으로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과 나라배움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합 측과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
- 퇴직공무원 중 연금소득공백 대상 인원 증가와 관련하여 퇴직자 사회공헌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지 질의
-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공무원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공무원연금 반납금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윤리복무국】

-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의 처우는 지방공무원 7급 1호봉 수준인 데 반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는 중앙공무원 고위공직자에 상응하게 적용되고 있는 바, 실제 처우에 합당한 법적 규제가 균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주식 백지신탁 현황에 대한 질의
- 감사원의 조치 사항 통보가 있었던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이 정부 산하기관장 후보자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 재심사 절차를 통해 취업 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취업 승인이 가능한 예외 규정 보완 및 세부 판단 기준 마련 등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같은 상호금융조합 감독기관 출신 고위 공무원의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중앙회 취업심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들 기관에 대한 취업심사제도 관련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대통령실 前행정관의 SGI 상근감사 임명과 관련하여 취업 승인 이전에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지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이 실정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

-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겸직 심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도를 보완하고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유튜브 활동이 정치적 의무 위반,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인사혁신처장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입장 질의
- 국가공무원 겸직실태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미신고 겸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 유무에 대한 질의
-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상급자에 대해 식사대접하는 이른바 ‘모시는 날’의 문제 지적
- 공무원 성비위 증가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장기근속 국가공무원 특별휴가제도에 관한 질의
-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의 음주 비위와 관련한 징계 등 인사상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문제 제기
-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 등 선물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한 질의

【재해보상정책관】

- 서해 어업지도선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심사가 현장 검증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독자적인 조사 없이 감사원 등 다른 기관의 자료에 의존하여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

- 공직 마음건강 위험관리 가이드 내 마음건강 자기관리법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

【인사조직과】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유튜브 활동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직허가 취소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유튜브활동과 관련하여 사직하거나 영상을 삭제하는 등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유튜브 영상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로고가 삽입된 것이 적절한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정철학의 이해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강사로 섭외하였다는 문제 제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정철학의 이해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강사로 섭외하였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적 의견 제시

5. 경찰청

- 경찰청 여성 고위직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
- 조직 개편으로 인해 현장 경찰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경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필요
-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필요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에 있어 공정한 수사를 통한 정확한 법 적용이 필요
- 대마 밀경에 대한 단속 강화 및 대마 씨앗 수입 사이트 차단 조치 필요
-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불균형하므로 일반직 공무원 비율 확대 필요
- 경감과 경위의 인력 과잉으로 하위 계급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치안 현장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

- 전직 대통령 자녀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 법 조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필요
- 김건희 여사의 뚝섬수난구조대·망원치안센터·용강지구대 방문 일정에 교통통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
-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기부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이 필요
- 금융노조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인한 국회의원의 부상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과잉 진압 방지를 위한 현장 지휘체계 개선 필요
- 대공수사권이 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및 간첩 활동 증가로 인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영등포경찰서의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 직원 연루 가능성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 규명 필요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관들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수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필요
- 지능범죄의 검거율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첨단 수사기법 도입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경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권력에 휘둘

리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

-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수사본부장, 치안정보국장이 방첩사령부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경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할 필요
- 쿠광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내부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착수 필요
- 퇴직 경찰의 쿠광 고위직 취업과 블랙리스트 사건의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쿠광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7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므로 제보자들에 대한 편파 수사 중단 및 쿠광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조치 필요
- 언론사 수사에 대한 편파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정성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경찰공제회 임원의 공석 장기화 문제에 대한 조치 필요
- 시민단체 '촛불행동' 탄핵기금 모금 등 매년 반복되는 기부금의 불법 정치자금 전용 우려 관련, 불명확한 기부금품 모금 등 기부금품 모금법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필요
- 해외주재관 파견 추천 철회 등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복 조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일선 직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소신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전주 포르쉐 음주운전 사건에서 현장 조치가 미비했던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징계과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직위해제 조치와 서울청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필요
- 수서경찰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원칙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수사부서의 업무 과중 해결을 위해 단순 인원 확충이 아닌 수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 배치와 장기근속을 통한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노력할 필요
-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여성청소년과 과장들의 수사경과 보유율이 낮아 우려가 제기되므로 전문성 있는 지휘관 배치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
- 가상화폐 사기사건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수사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 음주운전과 마약운전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마약 간이검사 키트 사용 확대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 필요
-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지 않은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다페스트 협약을 포함한 국제공조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건수가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음주운전 불시단속 등 예방활동 강화 필요
- 대공수사 전담 원년을 맞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적 투자와 국회 차원의 지원 필요
- 수사권 독립 이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
- JMS와 경찰이 유착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관련 경찰관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JMS 사건 전반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대응 필요
-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므로 경찰의 적극적 대응 필요
- 공익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존중하여 공정한 기준으로 경기도 법원카드 의혹 수사에 대한 부실수사 여부에 대한 재조사 필요
- 교제폭력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을 고려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일선 수사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식 부족 및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문제 개선 필요
- 수사팀 내 여성 경찰관 비율 확대 등 경찰 내부 문화 개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 대응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보복범죄 발생률이 높은 초동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역할이 강화될 필요
- 경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피기금) 예산의 약 4%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기금 내 피해자 신변보호 사업 비중이 낮은 점 지적
- 신설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사업이 검찰-경찰 간 이원화 되어있어 신변 보호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점 지적
- 신설 이용자가 없는 검찰의 안전가옥 사업을 경찰청의 임시숙소 지원 사업으로 일원화 할 필요
- 일선 경찰을 주체로 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필요
-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용 면허 도입을 추진할 필요
-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과 관련하여 국민 안전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 필요
-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의 통합을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필요

-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관련하여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위험 운전자를 판별하는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오송 지하철도 참사와 관련하여 유가족 지원,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 대책 마련 필요
- 비생계형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조치 마련 필요
- 선거 출마 후보자의 상습도박 의혹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 필요
- 유튜브 실시간 도박 채널이 제재 없이 운영되어 청소년들이 불법대출, 절도, 성매매 등 2차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국제협력 강화, 플랫폼과의 협조 등 전방위적인 대응 필요
- 적절한 수사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부담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집단 괴롭힘 사건 직권퇴교자 중 재입교한 사례 관련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
-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데이트폭력·성범죄 수사 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정보경찰에 대한 장기근무 인센티브 등 사기 진작 방안 마련 필요
- 경찰공제회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개선책 마련 필요
- 공익신고자가 제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기재했다는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공익제보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 및 징계 절차를 이행할 필요
-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의 구조적 개선 필요
- 무인점포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협회 및 점주들과 협력하여 절도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경찰의 신발 조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 및 재조사 필요
- 북한 이탈주민의 대북송금 수사 관련하여 북한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송금한다는 사정을 고려한 신중한 수사 필요
- 교제폭력과 관련하여 교제폭력처벌특례법에 대한 경찰청장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 필요
- 112신고시스템 내 교제폭력 관리 기능 개선 등 경찰청의 적극적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경찰관들의 헌신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가정폭력 사건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구속률이 낮으므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아동의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정 내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영종경찰서를 조속히 신설할 필요
- 자율방범대와의 협력 및 대민관계 강화 필요
- 공적 권한 없는 민간인을 위한 경찰력 동원과 관련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와 보고 체계 점검 필요
-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법 위반 문제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 필요
- 경찰의 자산 매각이 무계획적이고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관련 계획과 평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해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경찰대 졸업생의 대부분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실태가 경찰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 필요

- 특정 출신에 편중된 인사 구조 개선 필요
- 폐지된 파출소에 대한 안내 및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치안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집회·시위가 많은 경찰서는 집회·시위 관리 기능을 경찰서에서 분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 진척 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
- 경찰관의 영리 겸직 사례가 증가하여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실태조사 후 이해충돌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수사 단계별 공보 수칙을 명확하게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모니터링 체계 확립도 필요
-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 MBI 다단계 사건, KOK코인 사건, B&S홀딩스 사건 등 피해자가 수만여 명에 달하는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개별 경찰서 단위의 수사가 아닌 전국 규모의 통합수사 필요성 제기
-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의사 커뮤니티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주문 및 경찰의 엄정한 대응 필요

- 노후된 테이저건 비율이 높으므로 국산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촉법소년 범죄 증가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경찰관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강화 필요
-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태조사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중국산 CCTV와 관련한 보안 문제가 제기되므로 신속한 교체 추진 필요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원칙대로 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한국형 경찰장비 국산화와 신규 개발을 위해 노력 필요
-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자율운전 면허제 도입 검토 필요
- 고령운전자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뇌물죄 의혹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인지수사
필요
-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경호 시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세관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권력자의 심기 경호를 위한 공권력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경기남부경찰청의 범인카드 유용 수사와 관련하여 부실수사 여부를 점검할 필요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내사 및 수사 필요
- 불필요한 과잉 수사를 지양하고 신중한 수사 방식을 마련할 것
- 키스 시스템 개선 등 경찰 수사 통계(현황) 개선 필요
- 인터폴 미래치안회의, 국제치안산업대전 등을 개최하는 글로벌 치안 선도국으로서 치안장비·시스템 등 K-치안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보행안전 위협 및 도시미관 훼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기동순찰대의 신설 등 경찰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현직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
-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매뉴얼 개선 필요
- 성인 실종 관련 법률이 없으므로 입법 추진 필요
- 경찰청장이 현장 경찰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자부심 회복과 사기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

- 청원 경찰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 및 견인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 필요
- 일선 경찰관의 근무태만 사례에 대한 기강 확립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
-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 협력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치 필요
-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사건의 불송치 결정 경위에 대한 조사 필요
- 중심지역관서제 도입에 대한 우려 및 정책 재검토 필요
-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근거 마련 필요
- 압수수색의 경우 피의자 인권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지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경찰 내부 감독 필요
-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호 장치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사 기능에 대한 보강 및 강력범죄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금융노조 집회에 대한 강압적·기계적 대응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한강하구 해도 북한 제공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원진 내 과도한 경찰 출신 채용 비율 및 내부 직원 대상 업무추진비 관행 개선 필요

6. 소방청

- 경찰이나 해양경찰에는 지방청에 3급 부장 직위가 있는데 지방소방본부에는 본부장 아래 직급 중 최고 직급은 4급임. 지방소방본부에 3급 부장 직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인천과 경기 북부는 인구수와 소방 출동 건수가 많고 경북소방본부는 관할 지역이 넓으므로 해당 지역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적극 추진 필요
- 이재명 대표 소방헬기 이송 건에 대해 소방헬기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닥터헬기 지침을 적용해서 관련 소방청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한 권익위원회의 요구는 불합리하므로, 해당 소방청 공무원 징계 미의결 요청
- 중앙119구조본부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소방청 차원의 특별감찰 및 복무감사 필요. 이 경우, 감찰팀·감사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 필요
-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방향 마련 필요
-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1만 개 중 약 17만 개가 지하주차장에 있으므로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중요
- 공영시장 주차장과 같이 외부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이 출동하기 전까지는 초기 진화 방법이 없음. 리튬배터리 및 전기차 화재 관련한 소방청의 종합 대책 마련 필요

- 제3자 긴급구난을 위해서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이 필요하나 애플사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애플사의 아이폰을 이용하는 국민이 약 30%에 이르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 애플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의료대란 이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많아졌음. 정확한 의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급상황관리 통계에 ‘이송건수’ 외에 ‘이송요청 건수’도 파악 필요
- 의무소방 폐지 및 의료대란 등으로 발생한 현장의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언론과 접촉해서 개인적 의견을 발언하면 조사해서 조치하겠다”는 지침을 내려 입단속을 실시한 소방청장의 태도 지적
- 소방대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언론출연 및 발언 자제·금지 요구 지양 필요
- 의료대란과 각종 사건·사고로 현장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소방청장은 내부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평가 등급, 점수, 종합평가 의견 등 근무성적을 공개하고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의무소방원 제도 폐지 및 의료대란 이후 구급대원의 업무량이 증가했고 3인이 근무하는 구급차의 운행률도 88% 수준으로 떨어졌음. 현장 구조구급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2023년 기준으로 소방활동 현황은 5년 전에 비해 20.3% 증가했고, 119 구급소방대원 폭행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 공무원의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방청은 이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필요
- 소방력을 살펴보면 서울은 소방관 1인이 1,270명을 담당하고 있고, 산불은 영동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나 강원 소방본부는 춘천에 위치하는 등 소방 인력과 소방관서가 소방 수요와 어긋나고 있음. 소방인력과 소방관서를 소방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전국 시도소방본부 상조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시도소방본부 상조회의 운영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전남상조회·광주상조회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를 위한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완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이행계획 완료 연기 사유 중 하나인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가 남용되고 있어, 화재 예방 행정의 관행이 뒤틀린 문제가 있음. 현장점검, 조치명령의 활성화 등을 통해 화재 예방 행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소방용품 내구연한 제도 도입 후 소방청은 2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소화기에 대해서만 내구연한 제도를 도입하였음. 향후 소방용품에 대한 내구연한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내구연한이 지난 폐소화기 수거 방안 및 교체 기준 마련 필요
- 일반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급식비는 월 14만원으로 동일함. 그러나 근무 중에 일반공무원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나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일반공무원에 비해 월 평균 10끼를 더 많이 먹기에, 현행 정액급식비 제도는 불합리함.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의 논의를 통해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등 정액급식비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소방공무원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시도가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 소방공무원의 폭행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구조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소방공무원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직업성 질환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보건 환경 조성 필요
- 119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예방 방안 및 사후 구제 수단 마련 필요
- 소방공무원의 실화재 훈련 강화 및 현장지휘관 자격 인증 취득률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무인점포 화재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보급 필요
- 강제처분 절차가 복잡해서 강제처분제도의 현장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장 소방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강제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필요
- 국립소방병원이 계획대로 2026년에 개원할 수 있도록 의료진 인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및 전담 의용소방대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 되었으나, 아직도 시도 소방예산의 90%가 지방비로 이루어져 있음.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의 경남 보급률은 70%가 안 되고, 공기호흡기는 보급률이 서울·대구·제주는 100%이나 충남은 7% 수준에 그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각 지역별소방장비 보급률이 천차만별임. 소방의 국가직화 취지에 맞게 소방장비 보급은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필요
- 고위 소방공무원 중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전체의 70.4%를 차지함. 소방 조직의 발전을 위해 입직 경로에 따른 균형인사 방안 마련 필요
- 소방청은 노후 공기안전매트 교체 과정에서 실 성능 검증을 반드시 선행하고 고층형(5층 이상) 공기안전매트 인증 검토 시 안전성 보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아파트의 공기안전매트 관리 실태 전수 조사 방안 마련 필요
- 2024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서 경기도 소방관련학과(여성) 응시생 중 특정 면접실에서 다수 불합격자가 발생하게 된 결과에 대하여 채용 비리 내부 감사 및 결과 보고, 면접자들이 시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필요
-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이나, 각 지역별로 설치 유무 및 운영에 있어 편차가 존재하고 위원도 대부분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음. 각

소방서의 사정을 감안해서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화재안전조사위원회가 소방관서가 정한 화재안전조사 대상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 검토 필요

- 최근 2년간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강원을 제외하면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음. 공개율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서 향후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화재안전조사는 민간이 직접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보완하고 화재 위험이 큰 곳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소방의 다른 화재예방 조치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등 소방관서가 직접 실시하는 가장 광범위한 예방활동이나, 코로나19 이후 실시율이 급감하여 현재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5%대에 머무르고 있음.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소방청의 조치 필요
- 울산소방본부는 2021년부터 부·울·경 등 동남권의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한 특수재난훈련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나, 해당 훈련센터에는 국가항만을 포함하는 국가산단 재난훈련 특화시설이 미비함. ESS(Energy Storage System), LNG 병커링 시설 관련 재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에 필요한 관련 훈련 시설 건립 필요
- 2020년 이후 휴·폐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장기휴업 중인 주유소의 경우 방치된 유류 탱크의 누출로 인한 폭발위험이 있는 등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 휴·폐업 주유소 증가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
- 영세한 주유소는 대표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인 경우가 많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최소 4시간의 현장교육을 포함한 8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지방 주유소의 경우 교육 장소까지 거리가 멀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 상시근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음. 보수교육으로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경우 현장 교육을 양방향 원격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실무교육 방식 개선 검토 필요

- 부천 호텔 화재 등 숙박시설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24시간 운영 및 건축주나 시설물 관계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특성상 영업을 방해하면서까지 모든 객실 점검하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검휴무제나 상시기간점검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7. 지방자치단체

가. 서울특별시

-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관련 지적 : 업무 범위의 명확화 필요, 비자 문제 검토 필요, 이동 거리가 과도한 사례, 쉼터 문제, 노동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문제
-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같은 제도를 요양보호 등 그 밖의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의 입지가 문래동에서 여의도 한강변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한 부당성 지적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을 서남권 발전과 연계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서울 디딤돌소득 국제 컨퍼런스 기조발제와 다른 취지로 언론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한 질의
- 기본소득에 대한 보도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입장 및 기본소득에 관한 견해에 대한 질의
-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및 입장, 향후 고발 여부에 대한 질의
- 한강리버버스 사업의 문제점 등 지적 : 줄속 추진과 준비과정 미흡, 노선 축소, 비용편익분석의 기준 문제,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결여, 대중교통

으로서의 접근성과 안정성 및 신뢰성 미흡,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문제, 교통수단으로서의 운항 속도 문제, 업체의 건조 능력 문제, 사업 공정률 문제, 선착장 설치 운영사업과 리버버스 건조사업 분리 발주 문제, 업체 선정 특혜 의혹 문제, 민간사업자 수익보전 방식 문제

- 한강리버버스와 관련하여 교량 기준 등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주거복지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
- 한강리버버스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에 대한 반론적 의견 제시 및 증인 신문 : 운항 속도와 최고 속도 구분 필요, 제삼자공모 절차 경유의 적정성, 선착장 설치 운영사업과 리버버스 건조사업 분리 발주의 타당성, 대중교통과 관광의 상호보완적 고려 필요, 업체의 건조 능력 구비
- 한강리버버스 사업의 업체 선정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입장 질의
- 지반침하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 및 계획에 관한 질의
-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 서울린 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교육 기회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관련 이익의 적정 분배를 비롯하여 공공성 확보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21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기능고도화 및 GIS DB 정확도 개선 사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 업체와의 갈등 상황, 제재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
- 서울시 별내선 개통에 따른 혼잡도 증가 문제 지적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 전기차 화재 방지 방안을 위해 충전율을 규제하는 정책에 관한 서울시의 의견 질의
-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대상을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질의
- 한남 뉴타운 재개발 지역 내 유기동물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미해산 및 미청산 재개발·재건축 조합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청계천 차집관로 단면 보수공사 사례 등 서울시 발주 공사에서 하도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 필요
- 재개발이 중단된 지역에서의 빈집 및 무허가 빈집은 빈집 정책의 사각지대로 지역 슬럼화, 우범지역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재개발 중단 지역의 빈집과 무허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TBS 임직원들의 급여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와 노력 당부
- TBS의 독립법인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과 방송의 편파성 문제 제기, TBS 사태에 서울시장이 의도적 폐국 등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적 지적 및 증인 신문
- TBS에 대한 감사 지시의 부당성 및 행정안전부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요청의 절차적 문제점 지적, TBS 사태와 관련한 서울시장의 의도적 폐국 의도 등 책임을 제기하고 TBS의 편파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증인 신문
- 돌봄고독정책관 직위 관련 배경 및 역할에 대한 질의 및 MZ세대, 청년들의 은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미흡 문제 지적, 구단·연맹·협회 및 선수, 관객들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 현황에 관한 질의
- 서울교통공사 감사의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사용 사례가 드러났는데, 전체 산하기관 대표 및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철저한 감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쪼개기 편법을 통한 분양가 규제 회피 위법성 의혹, 동 사업에 관련된 모 건설업체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질의
- 서비스 제공 부실 등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출연이 해제되었는바, 향후 서울시 공공 사회복지 정책에 부족함이 없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장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지적, 동 서비스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높아지고 있었고 동 서비스원 폐지 의도 하에 경영실적을 떨어뜨린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민간기관 연계 관련 부당행위 의혹에 관한 질의
- 동교동 사저의 문화재 등록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과 협력 당부
- 서울시와 현대자동차의 GBC 프로젝트 관련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행정 제2부시장의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 지적
-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불법전대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디큐브시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상황이 지하연계 복합건물에서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 내고 기준을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독도 관련 조형물 철거와 관련하여 지하철 역사 내 미관 저해 각종

조형물 조사 및 철거 경위에 대한 질의

- IM 택시 단독사업자 선정 방식의 문제, 사업자 선정 기준의 문제 지적, 차량 대수 확대를 통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 급여 지급 문제, 노사관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불법전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대체매립지의 조속한 선정 등 수도권 매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한강 수상구조물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싱크홀 및 포트홀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탐지와 점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제2차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및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지하철 2호선 1인 승무제 추진 계획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방재안전직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규정 일몰되더라도 급격한 소방 예산 위축이 없도록 소방 분야 사업비 투자 비중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서울형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을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하였는데,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대책이 있는지 질의
- 도심내 MFC 허용 관련 안전조치 점검이 필요하고 안전기준 및 제도 오용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공공임대주택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 보조지표 중 하나인 장래세대부담비율이 서울시가 13%로 전국 1위이므로 미래세대 빚부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서울시가 탄소중립 정책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사용 현황 일제 조사에 따른 파면 및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외압이 있었는지, 재심 신청과 관련한 철회 의사는 없는지 질의
-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노동자 감전 사망 등 사고와 관련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있는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지적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예산은 급감하고 있는 반면 한강개발과 같은 전시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정책 방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제시
- PM 부당 견인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무면허 PM 운전을 근절하고 무분별하게 방지되는 PM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강남역을 포함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빗물배수터널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바,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수립과 조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환경공무원 쉼터 개선 및 기후대응 바우처 지급 등 환경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서울시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
- 우이방학경전철 사업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및 계획에 대한 질의
- 소방공무원 급식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로 인한 GTX-A 개통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서울창조타운 추진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서울창조타운 추진 사업에 대한 기업특혜 논란 등 반대 의견을 감안하여 부지 규모 조정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시·구비 매칭사업 관련 최근 2개연도 동안 계속 서울시 매칭 비율을 줄여 온 사업이 20개에 달하는 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벗어나는 주민번호 수집 조항이 있는 바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서울버스 축소 및 폐선 조치가 경기도의 폐선 철회 및 유보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는 바, 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 승화원의 서울 이전 필요성 등 지적
- 이승만기념관 송현광장 건립 문제 지적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인천시 및 경기도와 공동 주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관련 질의
-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
-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 집값 안정화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재건축·재개발 사업 및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추진 계획 질의
- 서울시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서울시 성인지예산 관련하여 목표 달성률이 17개 광역시 중 최하위이고 달성 비율도 낮으며 성인지예산의 내용도 부실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
- 서울시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위기임신 상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아파트 공기안전매트 관리 실태를 전수 파악하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경기패스-기후동행카드 연계 관련 질의
-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이 비즈플레이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서울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이 공공개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출입방법 개선을 통해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디자인 제안
- 감사원 감사 제보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세빛둥둥섬 사용기간 약정 내용에 관한 질의
- 골드시티 사업의 추진 상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질의

- 2021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허위신고 과태료 처벌 규정 신설 취지에 부합하도록 허위신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원활한 병역 이행과 공정한 병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
- 도심 내 불법 택배시설로 보이는 작업장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실태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나. 부산광역시

- 부산민주주의역사기념관에서 YS민주역사기념관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 질의 및 기념관 건립과 명칭 관련하여 시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 필요
- YS민주역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민주화운동이 기술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 방안 마련 필요
- 부산시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 질의
-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에서 기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서울시 해외 가사도우미를 벤치마크하여 해외 돌봄인력을 수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부산 원도심 빈집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 관련하여, 업무 전문성 및 해당 분야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명 필요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 3. 27.)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 전담 부서 구성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진행 중인 평가에 대한 자료 제출 필요
- 윤석열 정부가 민주화의 상징인 부마항쟁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한 지적
-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대통령 초청과 참석 요청 필요
- 부산 부마항쟁기념관 건립 필요성 지적
-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지원,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현황 질의
- 윤석열 정부의 부산 공약 이행률 저조에 대한 지적
-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전원 관련 질의
- 향후 부당한 병원 헬기 이송 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아시아드CC가 수익 창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익성 확보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부산시의 갈등 조정 필요성 지적

- 박형준 시장이 소유중인 엘시티 부동산을 적기에 처분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이행 필요 지적
- 부산엑스포 홍보비 집행 관련하여 해외 홍보보다 국내 홍보에 집중되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지출 방식에서도 칼럼 거래 의혹 등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
- 부산엑스포 기념품 선정과 관련하여 시립미술관의 추천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글로벌허브 부산을 위해서는 부산시장을 포함한 직원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 부산엑스포 관련 해외 기획보도 사례도 없는 등 해외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홍보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 필요
- 엑스포 유치 과정을 통해 도시외교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과거 사례도 보면 몇 번의 실패를 거쳐 유치 성공을 했음을 고려할 때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유공자 포상 대상 선정이 부적절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 필요
- 부산엑스포를 다음에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연제구에 위치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최근 무료급식 대상이 부산 시민 전체에서 연제구민으로 제한됐으나,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부산 내 저소득 어르신 모두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필요

- 부산엑스포 관련하여 해외 홍보는 민간이 주로 담당하였고, 부산광역시
국내 붐 조성에 힘쓰는 구조였다는 의견
- 영도선과 C-BAY선을 통합할 경우 B/C 분석 결과는 충분한 걸로 보이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영도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제한 폐지, 롯데백화점 앞 BRT 차선 설치로
인한 시민 안전문제 등에 대해 검토 필요
-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 삭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산도
재정 자립도 낮은 자치구가 많은데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질의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 필요 지적
-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노력 필요
- 기장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
- 원자력산업 관련하여,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부울경 광역철도’ 및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상황 질의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 필요
-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철마근린공원 조성의 조속한 추진 필요

○ 부산 강서구 불법 번식장 실태 관련

- 동물학대 실태에 대해 파악한 주요 위법사항 등 질의
- 불법 번식장 동물학대와 정부의 동물 보호 의무 수행 관련 질의
- 현행법상 미비점 및 추후 개선 방향 관련 질의
- 다른 곳에도 불법 번식장이 없는지 파악 필요

○ 55보급창(범일동 블랑서밋74 부지) 환경오염 관련 철저한 조사 필요

○ 범일 블랑서밋74 건축 심의 과정에서 토양오염 문제를 간과한 것은 아닌지 지적

○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복기를 위해 대흥기획의 완료보고서의 타당성 분석 등 철저히 점검할 필요

○ 김건희 여사가 참여한 부산 엑스포 키링의 구입과 관련하여 불법이나 부당한 과정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

○ 지역사랑상품권인 동백전의 발행액이 급감하는 배경에 대한 질의,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 및 국비 지원에 대해 정부에 건의 필요 지적

○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및 전체 시정에 걸쳐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 지적

○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입법적 조치

로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 가덕도 신공항 개항 및 부산형 급행철도(BuTX)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 될 필요가 있으며, 하단역에 복합환승센터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엑스포 홍보 예산으로 제작된 선물용 홍보물의 절반 이상이 부산시 창고에 보관 중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부족했다는 지적
- 풍피두 부산 분관 유치와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기획전을 하는 것도 검토 필요
- 초고령사회 진입, 2030세대의 부산 이탈 등의 인구 위기 우려를 돌파 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에 대한 질의
- 부산 사상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관련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상지역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 시행 필요
- 700억 원의 예산을 들인 ‘북항 마리나클럽하우스’가 운영자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는 상황으로, 마리나클럽하우스와 북항재개발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통망 구축 등 부산시의 협력 필요
- 심각한 부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부산시의 대책 질의
-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또는 감축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
- 지역자체예산으로 충당해서라도 상품권 사업 지속 필요

-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 상황에서 부산의 브랜딩 교체 작업에 25억원 지출한 것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
- 윤석열 대통령의 부마항쟁 기념식 참석과 부마민주항쟁 헌법정신 수록, 기념관 설립 등 적극적 추진 필요
- 제2대티터널 관련 추진 현황 및 추진 가능성, 제2대티터널 외 부산시의 대안 등에 대한 질의
- 제1호 국가도시공원 선정을 위한 부산시의 추진사항 및 을숙도 개발 관련 질의
- 부산시의 서부산권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입장 질의
- 국립치유의 숲과 주변부를 관광개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지적
- 동부산, 원도심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서부산권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 관련 질의
- 동부산의 50+복합센터처럼 서부산권에 50+복합센터 건립 필요하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우체국 부지의 활용 가능성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 부산시의 금융 창업도시 추진 관련 성과나 진행사항 및 부산의 벤처 투자비중 현황에 대한 질의
- 남부권 투자금융본부 역할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과 부산시의 협력방안에 대한 계획 및 산업은행 이전에 당면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사항 등에 대한 질의

다. 광주광역시

- 전북·광주시·전남이 모두 합치는 호남 메가시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통합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020년 11월에 행정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행정통합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및 지방소멸의 절박함 속에서도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질의
- 광주·전남이 쇼핑·교육·의료 등에서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초광역행정이 일상이 되고 있으므로 행정의 통합과 협력이 필요하고, 광주시는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남도민을 위해서도 봉사·서비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
-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의 대화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설득하는 리더십과 기피 시설을 받아야 하는 이전 지역의 입장을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이전 지역의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전라남도과 무안군에게 테드라인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한 것을 취소하고 플랜B 주장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하여 정부여당에 제안한 범정부협의체의 진행

경과에 대한 질의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하는 사무, 권한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시행할 필요
- 광주, 울산, 대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동일하고, 협력할 부분이 많지만 교통이 불편하여 협력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지적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구성된지 5년이 경과했지만 회의 개최 건수는 2차례에 불과하다는 지적
-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광주시민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어떤 의미인지 질의
- 5·18 정신을 대한민국헌법에 수록하여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고 뿌리내리도록 할 필요
-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때 5·18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접두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회로 한강 작가의 기념관 또는 5·18 관련 문학 작품에 대한 기념관 건립을 검토할 필요
-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 수배자, 해직자,

강제징집자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는데 2024년에 실시된 8차 보상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자, 수배자, 해직자 중에 보상받은 사람이 없다는 지적

- 5월 광주, 5월 전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민주화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사항에는 신청과 심사가 상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폐지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노력하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노력할 필요
-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으로 언론 통제에 반발했다가 해직된 언론인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지만, 보상 기준에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50%를 지방비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광주광역시의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모범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지적
- 광주광역시는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하고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비상한 상황만큼 기존의 관행과 규칙을 벗어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
- 광주광역시는 20대와 30대의 순이동률이 각각 $\Delta 2.2\%$, $\Delta 1.1\%$ 로 순유출률이 높고 생산연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
- AX실증밸리 조성사업 등 AI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재확보가 중요한데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수, 학생이 유출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 광주광역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11억원을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구성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집행률이 0%로 낮다는 지적
- 광주광역시는 연간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받은 금액이 5억원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9위 수준이고, 광역시 공식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고향사랑기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라는 지적
- 광주광역시가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 10시 출근제,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 손자녀 돌보미 지원,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등 저출생 문제 대응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바란다는 지적
- 학부모 10시 출근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학부모 10시 출근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반응은 어떤지, 어린이집·유치원생 학부모에 대한 확대 실시를 고려해보았는지에 대한 질의 및 저출생 관련 좋은 정책을 만들고, 공유하고, 확대하는데 매진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의견
- 대학생 아침 한 끼 사업과 산업단지 노동자의 반값 조식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
- 2023년 광주광역시 공무원 중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8.3%로 전국 평균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
- 집중호우 시에 소하천 범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의 소하천 정비율은 1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20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소하천에 대한 과소투자의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곳은 소하천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 국지성 집중 호우 등 기후변화로 하천변 파크골프장의 수해 피해 우려가 있고, 파크골프장 중 1회 복구비용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광주서봉파크골프장으로 7억 3천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지적
- 광주광역시는 지난 5년간 싱크홀 발생건수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인데, 싱크홀이 발생하는 빈도가 많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및 관련 법에서는 지반침하 위험도가 높은 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는 중점관리 대상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의 철거가 마무리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철거작업이 시작된 후 서구에 접수된 238건의 민원 중 받아들여진 민원은 2건에 불과하다는 지적
- 소방청은 노후 공기안전매트를 전수 교체할 계획인데 공기안전매트의 표준이 없으므로 교체과정에서 실 성능 검증이 선행될 필요
- 아파트의 공기안전매트 관리실태를 전수파악할 필요
- 5층 이상의 고층형 공기안전매트 등을 활용한 구조 작전 시 충분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훈련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화재 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급감한 채 정체되고 있는데,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거의 구성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내부위원만을 위촉하고 본부 계획의 형식적 의결 등 유명무실화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실태를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독려할 필요
-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 1,162단지 중 460단지(39.6%)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광주광역시와 소방안전본부는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업무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 소방 급식에서 이틀 연속 동일한 메뉴가 나오거나 영양적인 측면에서 부실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소방 급식과 관련한 조례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복지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 광주광역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방재안전직 확충 등 재난관리 전문 인력 확대를 위해 실시한 노력,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분야 전담인력 충원 실적이 미비한 원인 및 방재안전직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정부·국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 광주광역시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공직사회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 광주광역시에 있는 40개 파출소 중 11개소의 파출소에는 경찰관 1명만 근무하고 나머지 파출소에 경찰을 배치하는 중심지역관서제도에 대한 민원이 많고, 자치경찰제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정부가 2024년 5월 30일 발표한 계통포화 해소 대책에서 2031년말까지 호남·제주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정책은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광주광역시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율 목표를 22.1%로 설정했지만, 2021년 기준 3.9%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
- 광주광역시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질의
-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사협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파업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및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임금과 관련한 약속의 이행 실패가 현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가 아니라는 지적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의
- 광주광역시가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초기 입사한 노동자들에게 주거복지 계획을 초기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초 광주광역시가 제시한 최초 주택의 입주시기에 대한 질의
-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8월 출범한 6기 노사민정협의회는 임기 2년 동안 회의 4번, 안건 3개를 처리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으며,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갈등이 커지면서 노사민정협회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

- 광주광역시의 노동정책을 만드는데 노동회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드린다는 의견
- 광주광역시는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를 4조 5,000억원을 발행했는데 향후 국비 배정액의 감소로 발행규모가 축소되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광주광역시가 15개가 넘는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더하여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중 창업지원 사업이 없다는 지적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개관 예정일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되었는데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 광주광역시의 공공배달앱 점유율은 17.3%로 높은 수준으로 그 원인에는 재정투입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 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광주광역시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출연·출자한 기관 등은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목표 대비 실적이 낮은 상태이고,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으므로 기업이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광주광역시의 노점상 관련 민원이 올해 3,105건에 달하지만 최근 5년간 시·구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한 정비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지적
- 광주광역시에 복합쇼핑몰 3개가 입점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걱정이 크다는 지적
- 전남·일신방직 부지에 9만평 규모의 관광문화예술쇼핑 융합단지를 조성 중인데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대안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동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공업지구를 상업지구로 변경하고, 원도심 상업지역의 침체를 이유로 주거 외 용도 의무비율을 낮추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
- 광주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첨단 3지구 조성사업의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A5블럭에 96세대가 증가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 광주 중앙공원1지구 조성 사업부지에서 청동기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 491점이 발굴되었고, 당시 발굴조사단은 광주광역시 및 국가유산청에 추가 발굴을 제안했으나 추가 발굴 없이 개발공사를 재개한 이유 및 개발공사 재개로 인해 문화유산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광주광역시의 입장에 대한 질의
- 목조건축 및 국내 목재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

- 정율성의 행적을 고려하면 정율성을 추모하는 성격의 역사공원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및 정율성 역사공원 관련 전물군경유족회 등 보존 관련 단체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광주 서구청 현 청사(지상 7층, 지하 2층 17,000여㎡ 규모)를 2011년 8월에 준공(총 사업비 500억원)한 이후 보건복지 분야의 인력 증원으로 2018년 건물을 증축(예산 21억원)하고, 인근 민간 건물을 임대 사용중이며, 2021년 1월 광주 서구청 2청사를 건립을 추진(총 사업비 196억원)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청사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2청사 추진 과정에서 매입 건물에 대한 법적 분쟁의 발생 및 건물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의 발생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추가 재정이 소요되었다는 지적
- 도시철도는 정부 지시와 법령으로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해 무임 승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광주 서구 마북동 탄약고 이전 공사의 예산 80%가 집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남은 공사를 재개할 필요
-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FC 축구단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예정되었으나, 경기 2개월을 앞두고 콘서트 대관을 허가하여 잔디가 훼손되어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치르게 되었다는 지적
- 광주축구센터 반복되는 배수 문제 및 전용구장 시설 문제로 선수들 훈련과 경기, 관람객 이용에 문제 발생. 자체 감사도 실시했던 문제인만큼 확

실한 대안 마련 필요

- 광주광역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선언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2010년 38%에서 2021년 26.2%로 낮아졌고, 6개 권역에서 승용차는 가장 빨리 도달하는 반면 대중교통으로 도달하기 어려우며, 공영주차장의 1급지 요금이 2,000원으로 자동차 중심으로 체계가 짜여 있다는 지적 및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4만 3천명이 660억원을 체납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58명이 143억원을 체납했으며, 외국인 체납자로는 이란인 1명이 부동산 취득세 1,4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지적
- 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3,616만장을 인쇄하여 15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자고지 비율은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13.9%, 지방세의 경우 7.6%~12.5%에 불과하다는 지적

라. 울산광역시

-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관한 정책 필요하며, 교육·문화·예술 등 무형의 소프트 파워에도 신경을 쓸 필요
- 조선업 내 국내 숙련노동자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
- 울산시 내 소나무 재선충병 현황 및 대책

- 망양골프장과 관련하여, 원형지 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가 이루어진 점, 법률 위반 사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이 이루어진 점, 건설사 사장과 울산시장이 사적인 모임을 가진 점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인 동의 문제, 배전망 확보 등에 있어 울산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조선업 쇠퇴에 대비하여 부가적 산업구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울산판 큰바위 얼굴 사업, 세계 최대 성경책 사업, 대왕암 앞바다 불상 건립 사업, 변영사거리 공중정원 조성 사업 등은 전시성 홍보 성격이 강하며 정책 일관성이 낮으므로, 사업 검토 단계에서 지역주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
- 저상버스, 장애인 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률이 미진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울산시 내 공공의료기관이 1개소이므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
- 울산시는 징수한 국세 대비 교부받는 보통교부세 규모가 비슷한 규모의 타 시·도 대비 저조하므로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최근 울산시 남구 과밀화됨에 따라 교통, 교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울산연구원을 통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 세수 핑크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미교부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
-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하고,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자원시설세를 개편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할 필요
- 반구대 암각화는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울산시의 용수 확보 문제를 해결하면서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울산시는 향후 개발에 있어 생태환경 측면을 고려할 필요
- 울산시의 장애인 수 증가율 대비 저상버스 등 교통이동수단 증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
- 울산시의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으므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
- 울산시 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일·가정 균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
-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민사회와도 협의하여 용수 확보 문제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LNG 터미널, 가스전 개발사업 등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울산 사업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재검토할 필요
- 독일의 북해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생산 모델을 참조하여, 수소도시 조성 계획에 해상풍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을 포함하는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전환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울산시 차원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산업단지 내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울산시 내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높으며, 대출연체에 따른 보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울주군 망양골프장 시행사인 (주)산양 대표가 그린벨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으며, 그린벨트 내 골프장이 조성된 점에 불법성이 있으므로 울주군에서 변경허가 승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울산의 고래 문화 보존을 위해 고래생태체험관을 폐관하지 않고 유지하고, 수족관 내 고래 4마리를 치유·회복하여 방사 가능한 조건으로 만들 필요
- 울산시 내 분산에너지 특성화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등 외국인력을 활용 가능한 비자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
- 전시행정으로 지적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
- 망양골프장 건설 내 위법 사항을 유관 부서에서 점검하였는지 여부

- 6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된 태화호 프로젝트는 투입 대비 운항 실적이 저조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와 같은 프로젝트 추진 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
- 삼산·여천 매립장을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기보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고유의 특색을 살려 국제정원박람회와 조화되는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삼산·여천 매립장을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있어 공론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
-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간 소통 창구와 같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 비점오염 저장계획만으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시까지 삼산·여천 매립장 부근의 악취, 침출수 문제 등을 원활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속도감 있게 해결할 필요
- 현재 화물 적재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태화강역 주변 철도부지가 국제정원박람회장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
-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중앙정부와 울산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 권한 이양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
- 울산시에서 추진한 공업축제에 공무원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울산시 내 예산·정책에 대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할 필요
- 울산시장이 민주평통 울산지역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한 사항이 부적절

하였다는 지적

- 울산시가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유발효과
-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변화하기 위해 노력한 타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울산시의 이미지를 바꿀 필요
-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5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울산시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울산시 내 청년, 여성 일자리 감소 문제
- 울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할 필요
- 최근 3년간 매년 수천억원의 잉여금 발생 사유 및 효율적인 예산 활용방안
- 울산시의 민관 교류인사, 기업 투자를 이끄는 지원조직의 강화, 공무원 직렬을 타파한 능력중심 업무 배치 등 인사정책의 성과에 관해 질의
- 울산시의 친기업행정을 모델로 행정안전부예규에 신설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에 관한 의견
- 국립예술단체가 2년 연속 울산시 내 공연 실적이 전무하므로 문체부와 함께 국립예술단체 공연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내 공인노무사가 채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

노동부와 협의하여 지청 내 공인노무사 처우 현실화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울산국가산업단지 내 대형화재·폭발사고 위험성에 대비한 소방안전 대책에 대한 질의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구현을 위해 비수도권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 가덕도신공항 개항시기 대비 철도 준공시기가 2년 늦어져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며 승용차 위주 이용에 따라 접근도로의 정체가 우려된다는 지적
- 울산이 제안한 가덕도신공항까지의 철도노선에 대한 입장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
-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 외국인근로자 확보 방안
- 삼산·여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수질 및 악취 문제 해결 및 예산 확보 방안 질의
- 동해남부선 복선화에 따른 태화강역 유희부지 활용 방안
- 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연계해 새로운 관광모델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신안군 ‘햇빛연금’ 사례처럼 울산에서도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울산형 에너지상생모델(울산 바람연금)’을 검토할 필요
- 울산시민의 고속도로 무료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및 동서축 도로망 개설 방안

- 울산의 도로 구조상 경부고속도로와 공장 간 거리가 멀어 산업물동량 수송에 어려움이 없는지 여부

마. 경기도

- 경기도 성인지예산이 감소하고 있고, 성평등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 부지사로 변경하였으며, 성평등위원수를 40명에서 30명으로 감축한 것이 양성평등 기조와 상충된다는 지적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공익환수를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질의
-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 일산대교 무료화 대법원 최종 취소 판결과 관련하여 정책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
 -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찬성 여론이 있었고, 상대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도 공약을 하였다는 지적
-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논란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
-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관련
 -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과정 등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

-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의혹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지적

○ 경기도 재정여건 관련

-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전임 도지사의 재정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
-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감세 정책, 세수추계 오류 및 지방교부세 감액 교부 등에 있다는 지적

○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 경기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이례적으로 많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
- 이재명 전 지사의 혐의가 복잡하고 다수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횟수가 많다는 지적

○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관련

-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공약이 경기도 등 관계 기관간 협의 없이 발표되는 등 실현가능성이 부족했다는 지적
-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하여 김포시 주민의 찬성 여론이 높다는 지적

○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및 국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

○ 국산 소방헬기 도입에 대한 질의

○ 고양시 시청 건축사업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에 관한 질의

- 공공 RE100 달성 계획에 관한 질의
- 경기도의 소송건수 및 패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 경기청년사다리 사업의 인솔자와 관련한 질의
- 주 4.5일 근무제의 재원 및 적절성에 관한 질의
- 대체매립지의 조속한 선정 등 수도권 매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둘러싼 동두천시와 주민 간 갈등을 경기도가 중재하기 위해 나설 필요가 있고, 해당 건물을 도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하여 임박한 철거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경기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필요
- 김포골드라인 증차 예산 지원 필요
- 3000번 버스 증차 및 노선 급행화 협조 필요
- 접경지역 오물풍선, 대남방송 관련 관련법 발의, 대안 마련 등 정부와 여당의 역할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협조 요청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
- 오물풍선뿐 아니라 대북전단, 대남·대북방송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매우 고통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에너지이용합리화평가 결과 경기도가 17개 시도 중 10~11위에 머물고 있어 기후정책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 공공의료원의 재정 적자 문제와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
- 공공기관 평가 시 경영 효율성을 주로 평가하나 공공의료 분야의 경우 공익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

바. 충청북도

- 충청북도 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명절선물 구입에 사용하는 문제 시정 필요
- K-바이오 스퀘어 관련 성과 확보를 위해 의료 인재를 확보하고 및 산·학 연계 생태계를 구성할 필요
- 충청북도의 화재 현장 골든타임 내 도착비율이 저조하므로 개선 필요
-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인원 및 부서가 가장 적어 화재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충청북도에 소방학교가 없어 전문교육을 매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조적인 개선 필요
-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은행에만 예치하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에 사용 필요

- 충청북도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자체 사업이 없다는 지적
- 충청북도 내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오송참사 발생 시 충청북도지사의 초기 대응 및 현장 부재와 관련한 지적
- 충청북도지사 소유 임야와 관련된 특혜 의혹 관련 질의
- 제천 화재 관련 피해자 지원방안 더욱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
- 행정정보 공개가 미흡한 부분 개선 필요
- 소방안전교부세 외에 추가 재원확보방안 검토 필요
- 충청북도 출연기관 성과급 지급기준이 행정안전부 지침과 다르므로 충청북도의 지침을 기관에 통보 또는 행정안전부 기준과 통일 필요
- 청남대 방문객의 접근성 제고 필요
- 오송 참사 관련 각 기관의 미흡한 대응과 관련하여 국정조사 요구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한 추진 방안 질의
- 오송 참사 피해자에 대한 청주시의 동의 없는 의료정보 수집 의혹 관련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필요.
- 충청북도지사 금전 거래 의혹 관련 질의
- 재난 상황 발생 시 지휘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 질의

- 충청북도 소방서 급식단가가 최하위 수준이므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충북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교수진, 강의실 및 교육시설 등 차질없이 준비할 필요
- 충청북도의 공동주택 화재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와 소방안전본부는 준공 당시 설치 의무가 부재했다는 이유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 충청북도와 소방안전본부는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및 관련 논의 진행 필요
- 오송참사 당시 충북소방의 문서조작 혐의에 대해 최근 혐의 당사자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점 지적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순위가 크게 하락한 점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자체사업 없이 국비 매칭사업만 실시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

사. 전라남도

-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성 환경영향 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의 적절성 및 부정확한 전문가 검토 보고서에 관한 지적
-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계통으로

전환하는데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별 맞춤형 기본소득을 확장하여 전라남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전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혁신 행정을 달성할 필요
- 지역의 발전과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COP33을 전라남도가 유치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
-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한 갈등 최소화 방안, 국비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지적
-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나주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한전공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과도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지적
- 전라남도 내 소방서의 낮은 급식단가에 관한 지적
- 남해안권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남해안권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에 관한 지적
- 광주 민간공항·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하여 전라남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
- 예산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 기존 예산 구조 및 사업 등에 미칠 우려에 대한 지적
- 원전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지적
- 다른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전라남도만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지적

- 전라남도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에 관한 지적
- 전라남도가 직면한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소비 및 지역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관한 지적
- 전라남도 지역내총생산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관한 지적
-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의 낮은 사건처리율에 관한 지적
-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한 지적
- 중대재해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방안에 관한 지적
-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상향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한 지적
- 계통 포화 해소 대책, 재생에너지 사업의 붕괴우려 및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에 관한 지적
- 목포·순천 지역의 통합 의과대학 설립에 관하여 합리적인 방안 필요성에 대한 지적
- 보통교부세 미교부 상황에 대응한 전라남도의 재정전략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지적

- 섬 개발 특례 부여 및 인허가 의제화, 영세도선 국비 지원 등에 관한 지적
- 김 생산량 향상을 위한 대비책 및 수출 시 발생하는 통관거부 등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지적
- 신축 아파트 하자 수리 갈등 조정 및 대책 마련 필요성에 관한 지적
-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원 필요성에 관한 지적
- 성재생산 기본조례 제정 및 임신중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임산부의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할 필요
- 여수산업단지 롯데케미칼 선원동 사택 아파트단지의 올바른 부지개발 방향과 관련하여 여수시의회·시민참여기구 등과 협의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에 관한 지적
- 목조건축 및 국내목재 이용 활성화 필요성에 관한 지적
-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전라남도의 정책에 관한 지적
-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방지를 위한 전라남도의 정책에 관한 지적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지방사무에 떠넘기고 있으므로 국고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
- 전남도립대 임기제 공무원 부정채용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지적
- 환경 및 생태 중심의 ‘섬 재생 방안’ 등 섬 발전 방향 수립 필요성에

대한 지적

-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공동주택의 소급적용 및 설치 지원 방안에 대한 지적
-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대응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농정당국에 대한 대응과 시장격리 및 추가매입 등 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
- 영농폐기물 수거량이 전남도가 가장 많으므로 처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

아. 경상북도

-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 해결을 위해 부지 이전 관련 로드맵 필요
- 경주 안강 두류공업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 진행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 관광자원 활성화 및 교통편의를 위해 포항 영일만 횡단 해상 교량 설치 필요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관련하여 공공성을 고려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이격거리 규제 완화, 이익공유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필요

- 경상북도 조례와 달리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를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시·군의 조례 개정 필요
-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행보보다 민생에 집중하는 도민을 위한 행정 필요
- 대구·경북 통합 관련
 -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의 모든 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균형있는 대안 마련 필요
 - 행정통합이 주어진 시간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경상북도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많으므로 산사태 예방 및 대책을 강화할 필요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법 모색 필요
-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공적 모델 개발 필요성, 진행 중인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
- 전입실적 제출 등의 방법보다 근본적으로 인구수를 늘릴 수 있는 저출생 대응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집행률 저조에 대한 극복방안 모색 필요
- 2026년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필요
-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을 통한 만반의 준비 필요

-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숙박시설 확충 및 대안 필요성 지적
-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에서 한국형 청소차 적정 보급에 노력할 필요
- 경상북도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이 저조한 바, 활용처를 찾기 위한 노력 필요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지정기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필요
-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한 어민 피해 우려에 대해 대책과 계획 마련 필요
- 성인게임장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불법 성인게임장 실태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 필요
-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성인게임장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장 단속·제재 필요
- 박정희 동상 관련
 - 경북도청 앞 박정희 동상 건립에 대하여 자발적 모금 여부 확인 및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 수용 필요
 - 경북도청 앞 박정희 동상 설치 추진에 대하여 시민과의 공유 및 소통 필요
 - 경주 보문단지 관광역사공원의 박정희 동상 철거 필요

- 산업화에 대한 공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위원들마다 다를 수 있음

- 대구·경북 영어마을의 보조금 이중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반환조치를 통한 정산 외에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질의 및 행정처분 필요성 지적

자. 제주특별자치도

- 현행 행정구역 체계의 문제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 질의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필요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 이유, 주민 설득 방안 질의
- 도 행정체계 개편시 기존 지방재정 배분방식(보통교부세 3% 정률제) 변화로 교부세 급감이 예상되는 바, 관련 상황을 공론화해 도민들과 투명하게 논의했는지 여부 질의
- 행정체계 개편시 행정자치-교육자치 통합 필요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행정구역(서제주, 동제주, 서귀포) 설정 근거 질의, 생활권-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문제점 지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후 질적 성장 미흡, 주민참여 저조, 도지사 권한 집중 현상 지적
-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필요
- 최근 인구 감소 원인, 대응책 질의

- 젊은층의 인구유출 증가와 관련하여 청년고용률 저조, 일자리 미스매치, 청년 일자리 정책 부족 문제 지적
- 귀촌 인구 정체 현상 지적
- 주민생활만족도 하락 지적
- 무사증 입국에 따른 밀입국 가능성 질의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질의
- 외국인의 제주 부동산 취득, 난개발 문제 지적
-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관광 만족도 저하 지적
- 관광지 고물가 지적
-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상업지역 내 음식점 규제 완화 필요
- 오버투어리즘 및 관광 기반시설 부족 문제 지적, 입도세 도입 등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현행 렌터카 총량제의 문제점 지적
- 알뜨르 비행장 평화대공원 조성 계획, 사업추진 현황 질의
- 평화대공원 조성 시 사격장 설치 계획 지적
- 제주도 야간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관심 필요

- 제주관광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 필요
- 불법 숙박업 증가 지적, 불법 숙박시설 감독·단속·수사 강화 및 세무당국과의 정보 공유 필요
- 문다혜 씨 불법 숙박업 의혹 관련 수사 현황 질의
- 농어촌 민박 위생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노키즈존 확산 방지를 위한 어린이 안전사고 정책보험 도입 등 정책 다변화 필요
-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 수행, 반려동물 테마파크·해수욕장 등 조성 필요
- 성읍민속마을 관리 이관 필요, 민원 내용·대응책 및 방문 활성화 방안 질의
- 외국어 상호 간판 규제, 한글 우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마련 필요
- 공무원 행사 동원에 따른 불만 증가 지적
-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노력 질의
- 제주 내 범죄 및 교통사고 증가 지적
- 제주 자치경찰 기마대 소속 말에 대한 과도한 안락사 실시, 기마대원 자격 부실 등 관리 문제 지적
- 외래종과 교잡종으로만 구성된 제주 기마대 현황 지적

- 기마대를 행사 지원 전용으로 활용하거나 승마교실로 전환할 필요
- 2026년 전국체전 개최시 승마 경기 운영 대비 필요
-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조사 실효성 제고 필요
- 제주 소방 급식 영양사 업무량 과다, 조리 인력 부족 문제 지적
- 제주소방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부족 지적
- 노후·미인증 공기안전매트 문제 지적
-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 재난관련 전문·전담 인력 확충 필요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사업비 의무 배분비율 특례 규정 일몰에 대한 입장, 보완 대책 질의
- 대형재난 대비 현황, 119특수대응단 설치 추진상황 질의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정책,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관련 정책 질의
- 일회용컵 반환 보증금제 컵 회수율 하락, 참여율 저조 문제 지적
- 추자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참여 필요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 추진 필요
- 제주 제2공항 건설 필요, 갈등 조정 및 반대여론 해소 방안 질의

- 제주항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전환 방안 질의
- 제주신항만 개발 시 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 수질 오염 및 침수 피해 방지대책 질의
-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성과 질의, 전액 국비 운영 및 인력 충원 필요
- 제주 4·3 사건 연구계획 수립, 민간연구소와의 연계 필요
- 제주 4·3 사건 관련 진행 중인 사업 현황 질의, 정부의 4·3 사건 왜곡 발언자 인사 단행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해외교과서의 제주도 영토 표기 오류에 대한 소극적 대응 지적
- 제주개발공사 점유율·매출액 감소 지적, 사장 교체 필요
- 2015년 약 45%의 제주삼다수 시장점유율이 최근 40% 아래로 하락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제주개발공사의 경영능력 개선 및 도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서귀포 이전 필요, JDC-도민사회 간 협력적 모델 강화 방안 질의
-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립 필요
- 제주 농산물 수급 안정 관리사업 진행 상황 및 성공 사례, 지원 근거 질의

-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 대책 질의, 예산 편성 및 성과평가 시 반영 필요
- 제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제주 지역인재 의무 채용 미흡 지적, 부족한 정주 여건 개선 필요
- 제주대학교 서귀포 글로벌캠퍼스 조성 필요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질의
- 일차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 정책 내용 질의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방안, 추진 현황 질의
-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민원 증가 지적, 대응 조치 질의
- 제주도민 기본소득 도입 필요
-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지적
-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의 취지, 서비스 확대 계획, 추가 인력 확보 방안 질의
- 제주도지사의 도의회 의원에 대한 존중의 태도 필요
- 지자체 대면 전시임무교육 이수율 저조 지적
- 김만덕상 수상자의 범죄 전력 문제 지적
-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상황 지적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국내목재 이용 및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내용 및 추진 방향 질의
-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정부와의 협력방안 질의
- UAM 상용화 추진 현황, 관광과 연계 방안 질의
- 15분 도시 추진 계획·현황 질의
- 제주도 공동주택의 62.2%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소급적용 및 설치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설 필요
-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재원 마련 방안 필요
-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단에 대한 대응 계획 질의
- 전자고지 활용 저조 지적

8. 공공기관

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대다수 데이터가 민간에서도 구매할 있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센터들을 통합관리·운영하는 방안 모색 필요
- AI 구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하여, AI 사업 지원금 비리 행위 적발 시 조치, 사업비 지급 시 결과물 확인 절차 및 관리방안,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의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질의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연이은 적자와 재정악화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검사수수료 산정 방식 개선, 정부 출연금 보조 등 재정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경남 거창군 승강기 시험타워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문제 해결 필요
- 승강기 부실점검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종합정보망을 새롭게 점검하고, 점검 기준 조정 및 처벌 강화 검토 필요
- 신축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최신 안전기준이 아닌 과거 기준이 적용

되는 문제 및 소방활동을 위한 비상통화 시스템이 승강기에 탑재되지 않고 있는 문제 개선 필요

- 최저가 입찰로 인해 표준유지관리비 공표제도 실효성이 전무하므로 적정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업체 관리감독 강화 검토 필요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고 장기표 원장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 인정자가 아니므로 장례절차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회장으로 치른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 민주공원 안장 기준에 민주화운동 관련 정부 포상 수훈자가 추가되며 민주공원 안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3명이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1명이라는 지적

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삼자 변제안을 거절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서 보상금을 법원에 지속적으로 공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

마. 공무원연금공단

- 화성상록골프장 전 대표의 갑질 비위사건에 대한 해임 조치가 10개월간

지연되는 등 미흡하였다는 지적

-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의 유관기관 취업자 16명 중 13명이 상록골프앤 리조트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자회사의 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공무원연금공단의 출산준비용품 지원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출산 장려 정책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고려아연-MBK파트너스 지배권 분쟁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기금이 MBK 사모펀드 투자자인지 여부 및 투자자로서의 영향력 행사 방향 등에 관한 질의
- 공무원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한 전범기업 투자 배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공무원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공직 마음건강 위험관리 가이드 내 마음건강 자기관리법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

바. 한국도로교통공단

- 음주운전 재범률 문제가 심각하므로 음주운전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신설되는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하여 자율주행 트랙을 설치하여 면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9.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가. 서울경찰청

-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 수사가 보궐선거를 고려해 지연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시세조종 의혹 수사가 지연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실시할 필요
- 성비위 혐의자가 현장 근무를 지속하는 등 조직 내 성비위 사건 처리가 부적절하므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필요
- PM 무면허 운전과 무인점포 절도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여업체 관리와 방법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치안대책을 마련할 필요
-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면서, 쿠팡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사건은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수사의 형평성이 문제되므로, 공정하고 균형있는 수사를 실시할 필요
- 방심위원장과 대통령 관련 사건은 소극적으로 수사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등 편향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수사 필요
-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채증한 현장 자료를 임의로 취사선택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교체를 통해 증거를 소실하는 등 증거물 관리가 부실하므로, 채증 영상의 촬영·보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시 통상적인 교통관리가 과도한 통제로 왜곡되어 정쟁화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
-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시 불분명한 지시계통과 교통통제, CCTV 영상 제공 거부 등 투명성이 결여되었으므로, 경호 활동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서울 관내 아파트의 경찰 출입용 폴패스 설치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저조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10개 이상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 계속 발생하는 등 제도운영이 미흡하므로 개선 필요
-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은 추석 연휴 직전 퇴근시간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방문이므로 개선 필요
- 경찰발전협의회의 운영 부실 관련하여, 강남 3구는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거나 회의록이 없고,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남성 83.7%)과 직업(기업 임직원, 자영업자가 절반 이상)에 편중되어 있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
- 민간인 김건희 여사의 한강경찰대 방문 시 공식적인 경호 요청이나

공문도 없이 교통신호기를 조작하는 등 과도한 경찰의 의전행위의 부적정성 지적,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로 일관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남대문경찰서와 수서경찰서 간 맥신 쿠 관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관할권 침해 및 부적절한 수사 개입이 있었고, 유 경감과 백 과장의 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관련 사건의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금융노조 집회 확성기등 일시보관조치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다치는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집회 관리와 국방부 종합민원실을 군사 보호시설로 잘못 판단하여 시민 민원제출을 제한한 사례에 대해 앞으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회 관리 필요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대상자의 이동 시 교통관리 및 안전 확보 조치는 경찰의 기본 임무이므로, 관련 조치에 대해 당당한 대응 필요
- JMS 관련 '나는 신이다' 제작 PD 수사과정에서 여청과가 아닌 수사과에 배당하고 류희림 사건의 경우 수사 인력 불균형 등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철저하고 균형 있는 수사 필요
- 영등포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전 관세청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복귀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수사 필요
- 금융노조 집회에서 현장 위험성 보고와 국회의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확성기등 일시보관조치를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 필요

-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수사2팀이 주민 치안을 위한 공간인 영등포구 신길동 초소를 사용하고 있어 주민 불만이 높으므로, 통합청사 이전 후 해당 공간을 주민 치안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경호 대상자 이동 시 상황에 따른 순간적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교통관리’로 표현한 것이나, 용어 선택의 모호성으로 인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설명 필요
- 대북전단 문제 등에서는 경찰력 행사를 자제하면서도 평화로운 집회에서는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만큼, 기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3지대장에 관한 노조원 분신방조가 가짜뉴스로 판명된 것과 관련하여 CCTV 유출 경위 및 명예훼손에 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에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부적절함 지적. 정확한 기준 마련 필요

나. 부산경찰청

-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장 증거 보존 및 대응 미흡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설명 필요
- 성범죄, 갑질 등 부산경찰청 내부 비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과 조직문화 일신 필요

- 우정 집배원과 협력한 공동체 치안 모델을 타 시·도청에 전파할 필요
- 드론 활용을 비롯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치안활동 모델의 지속적 개발 필요
- 교제폭력에 대한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솔루션 협의체 운영 외에 다중기관 위험평가회의 도입, 전문 캠페인 등 혁신적인 예방 및 대응 전략 수립과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법 집행 시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 및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와 응원 문화 조성 필요
-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문제에 대해 철저하고 적극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딥페이크 범죄예방을 위한 전문수사팀 운영 및 특별교육 강화 필요
- 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SNS 운영사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도피 사범 송환율을 높이며, 청소년 대상 교육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
- 교제폭력 및 교제살인 예방을 위해 기존 획일적 등급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수립할 필요
- 중심지역관서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교통체계 및 운전 환경을 개선할 필요
- 스토킹, 데이트폭력,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폭력배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할 필요
-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경찰청 조직개편에 따른 외사 기능 허점을 최소화하며 체계적인 범죄예방 대책 수립 필요
- 전직 경찰의 범죄자 변호 활동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사관 기피 신청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지구대·파출소의 인력 운영에 있어 현장 치안 공백을 최소화 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부산자치경찰의 빈집 치안 개선 노력(치안리빙랩 사업)을 평가하고, 자치 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사회 밀착형 치안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필요

다. 광주경찰청

- 중심지역관서제 시행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관할 지역 11개 파출소의 1인 지역관서가 공동체 치안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개선 필요
- 광주청 관할 축법소년 범죄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의 담당 학교 수가 과다하므로 적정 인력 배치 방안 마련 필요
- 시민 체감안전도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및 시행 필요
- 한국시리즈 관련 암표 매매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경찰청 내 주차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공간 확충 등 직원 복지 향상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광주지역 내 관계성 범죄(교제폭력, 스토킹 등)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필요
- 현장 경찰관의 관계성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체계를 확립 필요

- 여성청소년수사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경찰의 정치적 편향 수사는 경찰 수사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경찰관의 음주운전 등 비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시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시청, 구청,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경찰관 인력 배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인사 비리 근절대책 강구 필요
- 인사위원회가 경찰청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문제를 지적하고 외부 인사 참여, 내부고발 시스템, 계급 축소 등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광주지방경찰청의 체감안전도가 하위권에 머무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 부서의 업무 과중 문제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안전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 희망티움 통합지원단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국적 확대방안 마련 필요
-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 필요

- 중심지역관서제 관련하여 농촌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치안공백 문제가 크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내실있는 정책 추진으로 치안 확보 필요
- 직장 내 갑질 신고 사건에 대한 면직 처리 등 미온적 대처를 지양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경찰조직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경찰서 내 보안검색대 설치 미비를 지적하며 타 수사기관처럼 검색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자의 흥기 난동 등으로부터 경찰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강화 필요
- 테이저건 내용연수 경과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필요
- 승진 청탁, 뇌물수수 범죄가 관행적으로 발생하여 최근에는 광주경찰청장 등이 연루된 점과 외부인사가 참여하지 않는 폐쇄적인 인사위원회 시스템이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

라. 울산경찰청

- 외국인 범죄 및 마약범죄가 증가 중인데,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 정보수집 등 외국인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필요
- 가상화폐 사기, 사이버도박, 산업스파이 등 미래형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 양성과 수사의 연속성 보장, 부서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 필요

- KOK 코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MZ 세대 조직폭력배와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폭력배 전담팀 인력 확충 및 체계적인 대응방안 수립 필요
- 폴패스(공동현관 자동출입 시스템)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안 솔루션 도입 및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 필요
- 울산경찰청 전현직 경찰관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연루자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 및 징계, 로펌으로 이동한 전직 경찰관의 수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시스템 마련 필요
- 울산경찰청 지구대원 실적 부풀리기, 형사기동대 수사정보 유출 사건, 병가 중 장기 해외여행, 성범죄 사건 등등 내부 비위에 대해 철저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을 위해 24시간 운영 정신의료기관 확충, 경찰과 의료진 간 협력체계 구축, 합동대응센터 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묻지마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
- 폴패스(공동현관 출입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주민 설득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용어 선정 등에서 안전과 신뢰를

고려할 필요

- 지역적 특성과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과열 경쟁과 조직 결속력 약화를 부추기는 우수실적팀 특진 제도(현행 베스트팀 특진 제도) 등 획일적인 경쟁 시스템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울산 지역 파출소의 55%가 정원에 미달된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조차 어렵고, 112신고 대응에 위험이 초래되는 등 치안 공백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규모의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
- 수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사관 기피 신청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지킬 필요
- 우수실적팀 특진 제도 관련 지역별 특성과 범죄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경쟁 시스템을 개선하고, 0.1%의 극히 낮은 특진 비율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외국인 범죄 및 마약범죄 증가 문제에 대해 경찰청 조직개편에 따른 외사 기능 허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방 교육 및 정보수집 강화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접근 필요
- 경찰관들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승진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실적 평가 및 승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선 경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필요

- 0.1%의 극히 낮은 특진 비율로 인한 부작용과 승진 압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승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
- 범죄예방경찰관(CPO) 인력을 확충하고, 울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 예방 전략을 수립하며, 1인당 담당 인구와 면적이 과도한 지역에 대한 인력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망양골프장의 그린벨트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적법하게 처리할 필요

마. 경기남부경찰청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의 피고인 회유·압박 의혹과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필요
- 경기도 내 PM 음주운전 사고가 전국 최다 발생(253건 중 98건)하고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장애인 등의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사전 지문등록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등록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 마련 필요
- 외국인 급증(75만명, 전체 외국인의 33%)에 따른 치안 대책을 강화하고, 외사 기능 폐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P 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동원한 철저한 수사 필요

- 원희룡 장관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조사할 필요
- 6개월 초과 범죄사건 처리 건수가 증가 및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증가 등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양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필요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방안과 함께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로변 학교 주변 안전대책을 마련 필요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해자 제재조치를 시행할 필요
- 특정 수사 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재수사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부 범인카드 유용사건 관련 고의적인 부실수사 여부 질의 및 당시 수사 담당했던 전 경기남부청장의 선거 출마에 따른 수사공정성에 대한 오해 불식 촉구
-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여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신속히 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마약사범 검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판매책 중심의 유통망 차단 등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대책을 마련 필요

- 동탄경찰서 성범죄 강압수사 사건과 용인동부경찰서 여중생 전단지 사건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급격히 증가하고 저연령화되는 사이버도박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
- 무고한 청년을 성추행범으로 입건한 화성동탄경찰서 사건에 대한 책임자 징계 및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별건으로 분리 수사 중인 사건을 병합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기일 연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필요
- 여중생 전단지 제거 사건 등 과잉수사 방지를 위한 수사지휘 체계 개선 필요
-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건 등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
- 병가 중 해외여행 등 비정상적 복무 관행을 개선하고,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대북전단 수사의뢰 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필요
- 아리셀 군납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방산비리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 현장 경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필요
- 최은순 씨 관련 수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실시할 필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필요
- 용인동부서 여중생 전단지 사건 관련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수사를 개선하고, 법집행 과정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판단 필요
- 정신응급대응팀 과도한 업무 부담 줄일 필요
- 늘어나는 지하철 범죄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

바. 경기북부경찰청

-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령(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단속과 수사를 철저히 실시할 필요
-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5530건, 22회)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대처방안필요
- 고양경찰서 관내 지구대·파출소의 실가용 경력이 부족하므로 인력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휴직·병가자 및 시간선택제 근무자 배치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필요
-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에 따른 단속을 강화할 필요

-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 보장을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치안대책을 수립할 필요
- 고양특례시에 경무관급 서장을 배치하고 파주경찰서 신설 등 경기북부 치안역량 강화방안 마련 필요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해자 제재조치를 시행할 필요
- 정신응급대응팀 과도한 업무 부담 줄일 필요

사. 충청북도경찰청

-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필요
- 자치경찰 이원화 필요성 및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
- 충북경찰 소관 청사의 에너지 효율화 선언 및 시설 개선 필요
- 오송 지하철도 참사와 관련하여 112신고 조치 미흡, 근무일지 허위작성, 재난상황실 미운영 등 직무유기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 처벌과 직원들의 허위 보고서 작성과 같은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필요

- 경찰 수사정보 유출과 장비 관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일선 경찰서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
-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 확보 등 초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법적 보호수단의 적극적 검토와 집행이 필요
- 피감기관이 피의자 신분인 도지사를 기관 행사에 초청한 것은 형사 피의자에 대한 특혜이자 부적절한 처신이므로,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정대한 자세를 견지하고, 정부 편향적인 업무 진행이나 피의자 신분인 고위공직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차단하여 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 경찰의 현장 밀착형 치안 활동을 위해 중심관서·공동체관서 운영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잦은 조직개편이 현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평가가 선행될 필요
- 오송 지하철도 참사 관련 112신고 대응 미흡과 초기 대처 실패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충북청의 사이버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검거율은 급격히 하락한 상황

이므로, 수사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검거 역량을 제고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

- 충북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 대책 필요
- 학교폭력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방안 수립 필요
-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이양받은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수사 권한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필요
- 충북경찰청의 내부 비위 사례(음주운전, 시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를 언급하며 공직기강 확립과 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 충북 경찰의 살인사건 수사에서의 비상식적 사건 배당 문제 관련 공직 기강 확립과 수사체계 개선 필요
- 하수처리장 암페타민 검출 수치와 마약 검거 간 괴리를 언급하며 마약 문제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대응 필요
-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미흡 및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영장 발부와 압수수색 집행 시 신중을 기하고, 인권친화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관행을 개선할 필요
- SNS 계정 해킹 대응 및 보안 시스템 강화 등 경찰청의 정보보안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

- 중국산 CCTV의 해킹 위험성을 점검하고 국산화를 통해 보안을 강화할 필요

아. 전라남도경찰청

- 사이버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수사역량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해외 서버 문제 등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경찰청 전체 차원과 전남경찰청 차원에서 마련할 것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전남청의 경우 2019년 2,567명에서 2024년 9월 4,104명으로 1.6배 증가한 상황에서,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관리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인력 확충을 본청에 적극 건의하고 증원을 추진할 것
- 지방 경찰서의 특성상 담당 면적이 넓고(화순, 해남 등)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거주지가 산재해 있어 관리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최근 5년간 기소된 전남청 경찰관이 82명으로 18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점을 볼 때 공직기강 확립과 소속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특단의 점검 대책을 수립할 필요
- 전남경찰이 체감안전도에서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중심 지역관서제 운영(92개소)으로 인해 농촌 지역 주민들이 경찰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중심지역관서제의 효율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보완 방안 요청

- 농축산물 수확기를 맞아 절도 등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예방 기능과 형사 기능이 협력하여 더욱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
- 무인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청소년 절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무인점포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강구할 필요
- 승진 시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례를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할 것
-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특정 정권이나 사안에 편파적이지 않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할 필요
-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의 수사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전직 경찰관의 행인 폭행 사건 보도 관련 현직 경찰관의 기자 겁박 사건에 대해 엄중히 감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
- 나주경찰서에서 발생한 외국인 피의자 도주 사건과 같은 업무 방만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체계 재정비 요구
- 본청에서 지정하는 외사안전구역이 전남은 없기에, 특히 학산파출소 폐쇄로 인한 치안 공백 등이 우려되는 용당리 지역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 설치를 추진할 것
- 전남 199개 섬에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도서지역 치안 소요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완도경찰서의 ‘한달음선’ 운영(26개 민간 선박 선정)을 신안 등 타 도서 지역으로 확대하고, 출동 소요시간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도서 지역 치안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나주경찰서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 도주 사건, 살인사건 피해자 신상 관련 보고서 유출 사건 등 공직기강 해이와 내부 보안시스템 붕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경찰 조직 신뢰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 전라남도의 고령자 교통사고 유발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만큼,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와 적성검사, 치매검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버스 노선 증설 등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할 것
- 272개 도서지역 중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섬 지역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한交通安全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 징계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엄격한 기준에 맞는 공직기강 확립 대책 필요
- 수사자료 유출(박대성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
- 현행 인사위원회가 총경 이상 내부 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5~7명)되어 있어 인사 청탁의 구조적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위원장을 외부인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인사 시스템을 개선할 것
- 승진 청탁, 뇌물수수 범죄가 관행적으로 발생하여 최근에는 전남경찰

청장 등이 연루된 점과 외부인사가 참여하지 않는 폐쇄적인 인사위원회 시스템이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

- 중심관서제 운영이 자치경찰제 시행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이로 인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약화하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주민밀착형 순찰 활동 강화 필요
- 완도경찰서에서 압수물 현금이 절취된 사례와 관련하여 압수물·증거물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관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전국 최초로 실시 중인 민간인 수색활동비 지원 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 및 재해보상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 복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수사관행 근절을 위해 피해자 보호 의무 준수, 해당 수사관 인사조치, 불송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청
- 불법 온라인 도박의 심각한 피해사례를 고려하여, 도민 대상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
- 전남청이 딥페이크 범죄 엄정 대처를 선언했으나, 신고 접수 외에 자체 인지 수사가 전무하고 수사 종결 건수도 없는 등 실질적 대응이 미흡한 만큼, 전담팀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
- 수사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경찰 의견 미제시, 반대

당사자 진술 기회 보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

- 국감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음주운전 비율 등 경찰 기강 해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 필요
- 해남·완도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브로커 등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농어촌·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중심관서제 운영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우려되므로, 전남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

자. 경상북도경찰청

- 채 일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외압 및 수사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
-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채 일병 사망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독도경비대 전력공급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며 독도경비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 방안 마련 필요
- 채 일병 사망사건 수사에 있어 경찰청이 독자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했음을 확인하고 법리적 판단의 정당성을 입증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점검할 필요

- 채 일병 사망사건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 수사의 미비점 보완 필요
- 채 일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이첩 절차상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자 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지역 치안 현장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
- 채 일병 사건과 관련 수사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수사경과 부여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경찰서장 추천 비율이 전국 평균(31%)의 두 배에 달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차. 제주경찰청

- 병가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찰관들에 대한 솜방망이식 징계와 제보자를 색출·조사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한 만큼,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준수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출할 필요
- 범죄의 국제화·비대면화·익명화 추세를 고려하여 사이버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제주 지역 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엄정한 대응 필요
- 타 지역 대비 적은 인력 규모에도 성폭력, 주취폭행, 음주운전 등 다양한

비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의 경우 신고 대비 적발률이 13.25%에 불과하여 경찰력 낭비가 우려되고, 과도한 신고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 필요
- 외국인 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사과 폐지로 대응이 소홀해진 만큼, 본청에 외사과 신설을 적극 건의 필요
- 기동순찰대 인력이 타 지역에 비해 과다 배치되어 일선 부서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기동순찰대 폐지 또는 인력 감축 검토 필요
- 자치경찰제의 입법 취지인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심지역관서제도 시행을 보류하고, 치안센터 13개소의 현행 유지 등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을 지속할 필요
- 제주도 내 법의관 및 부검시설 부재로 인해 신속한 부검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과수와 협의하여 제주도 내 연구소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제주도 내 13개 치안센터 중 다수가 상주 인력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범죄 발생률 1위인 점을 고려하여 치안센터 존치 시 상주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치안 강화 대책 수립 필요
- 폴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수사정보가 유출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빅워크 협약 추진 과정에서 걸음 수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고, 민간업체 앱을 통해 경찰관의 실시간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보안상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정책 추진 시 신중을 기할 필요

-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하고 관광객과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범죄예방인프라가 부족하고 도심에 치중되어 있어 외곽 지역에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기동순찰대 설치(98명, 전체 인력의 4%) 후 112 신고가 감소했다고 하나, 일선 경찰 설문조사 결과 88.2%가 불만족하고 현장인력 감소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 마련 필요
- 성남FC 사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압수수색 실시, 불송치 사건의 검찰 송치, 이후 이례적인 치안감 승진 등 일련의 과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만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
- 제주청 암행순찰차 2대가 단속장비 없이 운영되어 과속단속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본청에 장비 도입을 건의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허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므로, 과속카메라 설치 확대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
- 연간 300건 이상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객 대상

캠페인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508건 적발 중 58건만 포상) 홍보를 강화하여 단속 실효성 제고 필요

-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 사망사건 관련, 제주시 관계자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실수사이므로 재수사 필요
-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 다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서류 전달이 아닌 구체적인 지원 절차 안내와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필요
- 파출소장 근무 중 음주, 동료 여경 성폭행 시도 경찰관의 시민 추행 등 제주경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제주도가 전국 시도 중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와 강제추행 건수가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관광도시 이미지 회복을 위한 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
- 테이저건 사용 건수가 저조하고 경찰관들의 범집행이 소극적인 만큼,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치안력 강화 필요
- 제주 불법체류 중국인이 1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외사계와 외사자문협의회가 폐지되어 외국인 범죄 대응이 어려워진 만큼, 외사계 신설과 외사자문협의회 재구성을 검토하고, 시민감찰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경찰 비위 예방을 강화할 필요
- 제주청 소속 경찰관의 기소자 수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경징계 위주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대책 필요

- 암행순찰차에 대한 단속장비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
이므로, 본청에 예산 요청 등을 통해 필요한 장비를 조속히 확보할 필요
- 교통사고 현장 이탈 후 허위 신고한 가해자의 주장만 고려해 뺑소니
혐의를 제외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재수사 필요
- 제주도의 고위험 음주율과 주취폭력 범죄율(18.5%)이 전국 평균
(13.6%)보다 높은 상황에서, 상습 범죄자 모니터링과 재활치료 등
체계적인 주취범죄 예방대책 필요
-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체감안전도가 전국 최하위인 만큼, 경찰-자율
방범대 합동순찰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필요
- 제주도 불법체류자 1만명 중 상당수가 밀입국을 통해 유입되어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만큼, 중국 공안과의 협력 강화 등
외국인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중국인 관광객의 미풍양속 저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해안경계 강화를 위해 TOD 보완과 드론 활용 등 치안 인프라
확충 필요
- 빅워크 행사가 종료된 만큼, 민간업체 앱이 설치된 경찰관들의 휴대폰
에서 해당 앱의 전원 삭제 요청 필요
- 제주 내 부검의 상주를 위해 의사 파견 요청 또는 지역 병원과 협의를
통한 인력 충원 방안 및 30년 이상 된 서귀포경찰서 청사 신축 관련
의견 검토 필요

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타. 새마을운동중앙회

파. 한국자유총연맹

10. 업무현황보고서 제출요구기관

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구축한 연계자료 사전 검증 과정에서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한 문제 지적
- 정부 지침을 넘어서는 인건비 인상률에 대하여 산출 기준·근거 및 재발 방지대책 질의
-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시책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사용과 관련하여, 시책 업무추진비의 산출 근거,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향후 개선 방안 질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의 오류 발생 등 문제점과 수익계약 과다 및 특정 기업 독점 구조 등 원인 파악을 통한 대책 마련 필요성 지적

VI.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행정안전부

【대변인】

【기획조정실】

【의정관】

【감사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근무실태 및 출장현황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파악할 것

【인사기획관】

【운영지원과】

【디지털정부혁신실】

-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인 정부24 내 정부·지자체 누리집 안내 오류에 대한 수정·보완, 향후 유지보수 계획을 보고할 것
- 정보 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행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 공공마이제이터 제도의 활용도 확대를 위해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장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시는 날” 폐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익명을 보장하는 온라인 신문고나 일대일 상담을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사업의 수의계약 과다, 특정 업체 과다 수주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매년 수천억 들어 종이고지서가 인쇄·우편발송된 후 폐기되고 있고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고지·수납 전자화 사업도 중구난방으로 추진중인 바,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구축에 광역·기초자치단체 발행 범위까지 포함하는 한편 전자송달과 관련한 서비스를 개선할 것

【조직국】

- 비교과 교사 법정정원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간호조무직 직급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인천과 경기 북부는 인구수와 소방 출동 건수가 많고 경북소방본부는

관할 지역이 넓으므로 해당 지역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경찰국】

- 국정과제 111번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 과제가 담보 상태에 있으므로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를 조속히 추진하고, 4개 특별 자치시도의 이원화 시범 도입 시행이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권고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
- 중심지역관서제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재검토할 것

【지방행정국】

-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단체들이 기부금을 정치운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통일문화연합 및 선한시민의힘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기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
- 여순사건위원회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진상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우키시마호 관련 공개된 명부 외에 나머지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조세이탄광 유해발굴과 봉환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
-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자유회관은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보수 및 보강 대책을 마련할 것

【자치분권국】

-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행정 체제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 권한 이양 등 지원을 철저히 할 것
-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미래지향적 행정체재개편 자문위원회 순회 토론회 강원·제주를 별도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
- 공무원 실무수습 수당 지급 규정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범위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서해5도 주민 안전을 위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출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해 협조할 것

- 중장기적인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준인건비 패널티 제도 재도입을 철회하고 패널티 제도를 유지할 경우 비정규직 양산 지양을 위해 패널티 산정 시 기간제(기타직) 인건비를 반영할 것
- 38년째 동결되어 있는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검토할 것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와 같이 분구 등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 통합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가 어떤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서 연구할 것
- 지방자치, 주민자치 인식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인 ‘새로운민심 새민연’이 설립 목적과 달리 정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균형발전지원국】

- 고향사랑기부금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기부 절차가 복잡하므로 플랫폼을 다변화할 것
- 고향사랑기부금의 오프라인 기부 시 답례품 선택과 기부가 단일 창구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하여, 민간플랫폼 허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
- 민간플랫폼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 유지보수비를 추정하지 않을 것
- 민간플랫폼 개방 계획을 지역정보개발원과 수립하는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할 것
- 고향사랑기부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시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등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고향사랑e음 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 지방자치단체 특색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기금 배분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실집행률 향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목표 관리제’ 도입을 검토할 것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증대 방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의료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시설 건립 및 의료인력 유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 기금 취지에 부합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기준을 정비할 것

- 난임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활용 허용을 적극 검토할 것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형평성 있는 평가기준 마련과 배분 격차 완화를 위해 균등배분을 기초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표준화된 지표를 마련할 것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관련

-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재정사업과 SOC민간투자 영역 사이에 사업 선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려할 것
-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대응사업을 1순위로 심의할 것
- 장기 프로젝트, 민간 투자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 마을기업 관련

- 신규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취소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24년도에 취소된 예비마을기업에 유예기간을 연장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 2025년에는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재개하고 마을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백령항로 대형여객선의 건조비와 운영비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
- 용진군 북도면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에 국비 지원을 검토할 것
- 故 서정우 하사 전사지 안보 소공원 조성 예산 반영을 검토할 것
-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빈집 정비를 위한 객관적인 통계를 마련할 것
-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비상벨 설치율이 미흡한 실정으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남성 육아 지원을 위해 남자화장실 내에 기저귀 교환대,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육아 시설을 확충할 것

【지방재정경제실】

- 새마을금고 관련
 - 새마을금고에 부동산 PF 대출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소상공인 및 지역금융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대구수성금고 불법대출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것
- 자회사 MGTV의 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

○ 지방교부세 관련

- 2023년과 2024년 연속 정부가 감액 추정안 제출 없이 내국세 감소 예측에 기초해 지방교부세를 불용 방식으로 지자체에 불교부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 지방교부세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매년 들쭉날쭉하고 근거가 투명하지 않아 제도개선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지방교부세 위원회의 결정 근거를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알고 소통하기 어려운 구조인 바, 의사결정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감액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편을 검토할 것
- 지방교부세 감정산을 분할 실시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것
-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에 지방교부세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 및 담배분 개별소비세 정보를 포함시킬 것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검토할 것

-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도로유지보수항목의 예산 증감분’ 및 ‘대형 화물차량의 이동량’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운영대행사의 부정행위, 국고보조금 부정 지급 등에 대한 관리 및 단속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인구소멸지역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를 검토할 것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 결정시 가맹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급주택 기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세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원 성과평가 조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노력할 것

-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3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기지급된 위탁사업비는 회수 후 재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세 고액체납 증가 추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명단공개 제도 도입이 형식적 공개에 그치지 않도록 재산추적 조사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장기 렌터카에 대하여 리스 자동차와 동일하게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로서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공공기관의 무면허 공사 행위를 근절할 것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요소(저렴한 가격의 체감 어려움, 카드결제기 미비, 현금가와 카드값 상이 및 사후 정보관리 미흡)를 살피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비자의 설문조사 실시를 검토하며, 소비자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 균형발전 사업의 진행상황 및 재정 누수 등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개선여부 등을 확인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보고서에 최종적인 감사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회계감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것

-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장기 미징수액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장기 미수액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채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 공유재산 특례는 지방정부의 예측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공유재산 특례 제한에 관한 2개 법률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공정적 검토가 필요
- 사업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문제점을 검토할 것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계약법령에 지역중소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된 지역제한입찰 대상의 기준금액은 2009년 설정된 이후 15년이 경과했으나 변경되지 않았고, 건설공사비 지수가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것
- 고양시청의 백석 이전을 위한 일부 부서 이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른 청사면적 기준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것

-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몇 년간 중앙투자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엄격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별 편차가 큰 지방공공요금의 지역별로 원가 산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일제점검에 나서고, 행정수수료에 대해서도 지역별 편차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
- 지방재정신속집행 관련
 - 업무추진비 개산급 적극 활용 및 업무추진비·공공요금·초과근무수당 당겨서 집행 등 편법적 요소가 있는 신속집행 관련 지침을 중단 또는 개선할 것
 - 부실공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리한 공사 선금 지급 지양할 것
 -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부작용을 양산하는 인센티브 제도 관련하여 기재부와 폐지 및 개선방안 협의할 것
 - 경기부양 효과가 불투명하고 부작용이 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할 것
- 지자체 금고에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이자율이 기준금리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금고 예치금리 현황과 관련된 정보 공개가 미흡한 실정인바 금고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는 한편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 수입을 공개토록 지방회계법 개정을 검토할 것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재난문자의 경우 중복·반복 발송 방지에 관한 사용기관 교육 내용을 강화할 것

【안전감찰담당관】

【안전예방정책실】

- 재난문자의 경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중복·반복 발송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승강기 부실점검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종합정보망을 새롭게 점검하고, 점검 기준 조정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출연금 보조를 검토할 것
- 신축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최신 안전기준이 아닌 과거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 및 소방활동을 위한 비상통화 시스템이 승강기에 탑재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관련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정비 필요
- 소방용품을 재난안전제품 인증하는 경우 소방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최저가 입찰로 인해 표준유지관리비 공표제도 실효성이 전무하므로 적정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검토할 것

-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최저가 낙찰 관행 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자연재난실】

- 반지하 가구 대상의 침수방지시설이 전국 10곳 중 4곳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데, 일부 집주인들의 설치 거부상황 개선을 위해 설치지원 시설을 다각화하는 등 노력할 것
- 재난대응활동계획은 2019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 지침은 2014년에 작성된 이후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개정할 것
- 재난대응활동계획에 SNS를 통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 방지 등 2차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할 것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미수립한 지자체가 있는 상황으로 우수저류시설 기준 및 배수펌프장의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
-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을 단체장 임기 내 전부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특히 광역단체장 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계획을 마련할 것

【사회재난실】

【재난복구지원국】

- 사회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과제 추진을 검토할 것

- 취약계층의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재해취약지역 보험 가입 대상에 반지하 가구를 추가하고, 보험료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재해대책과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 농어업재해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비상대비정책국】

- 북한 오물풍선, 대남 소음방송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도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실시할 것
- 대통령 집무실 공사와 관련하여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 조치할 것
- 특수관계인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것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자료 중 국가안보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하거나 자료를 열람하게 할 것

【이북5도위원회】

-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가 지난 10년간 부적격 업체와의 비정상적인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대통령기록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주도에 부검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하고 부검의가 상주할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제주출장소를 제주분원으로 승격 설립을 추진하고, 현재 제주도에서 부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가융합망 사업 관련

- 행정안전부에 전담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확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국가융합망 차기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타】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도나 신뢰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및 고발할 것
- 정당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보전금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해당 보전금을 반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
-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액수가 약 190억원에 달하므로 더욱 철저한 환수와 미납자 공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임박한 재보궐선거에 대비하여 사전투표소 불법촬영장비 설치 등 부정 선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선거관리할 것
-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 의뢰나 단속보다 사전에 선거법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우선할 것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한 명이 안내와 지도, 수사와 고발을 모두 담당하는 조직 및 구조를 개선할 것
- 사전투표에 있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투표소 부근 반경 100m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것
- 제1심은 공소 제기부터 6개월 내에, 제2·3심은 전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원 외에 선관위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

-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관위가 후보를 한 명만 초청해 대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강력히 제재할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조직·인사 개선 추진기구에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할 것
-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할 것
- 인터넷심의위원회, 방송토론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겸직허가 실태조사 관련 규정의 도입과 직원들에 대한 겸직현황을 조사할 것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기 위해서 인사 교대 주기 단축과 선거 제도 및 고발 절차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직선거 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

- 선거공보 및 벽보 홍보물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 진위 여부의 확인과 위반사항은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것
- 많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직전에 휴직을 하는 현상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개방직화 하려는 것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신중히 검토할 것
-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거비용 보전금이 35억 3,8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조치를 취할 것
- 선거여론조사의 품질과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론조사 세부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할 것
-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고 오염된 조사결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RDD조사 DB 선관위 제공 등)을 마련할 것
-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임기 및 자문 업무 관련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할 것
-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자진 사퇴함으로써 발생하는 재보궐선거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할 때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선거관리위원회 국외 출장 전수조사 결과 대다수가 외유성 출장으로 보이므로 국외출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전 출장 보고서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관련,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1국장이 마스크를 쓰고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시정할 것
- 조사1국장의 채용 시 자기소개서 제출을 적극 검토할 것
- 유해발굴 사업에 동일 업체가 계속해서 낙찰되어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발주용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진실규명사건을 왜곡하고 있는 조사1국장을 징계할 것
-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도록 유념할 것
- 위원장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 주장을 해온 만큼 자진사퇴가 필요하며 이런 인물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법률을 개정할 것
- 위원장의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 조사1국 직원을 대상으로 행해진 교육에서 부적절한 발언 및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등을 한 조사1국장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절차를 검토할 것
- 조사1국장과 운영지원담당관실 서무팀이 위원회 조사 등 업무추진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를 명기하여 진화위 명의로 진화위 소재 건물 관리 사무소에 CCTV 열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 절차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
-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을 줄속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진실화해위원회는 출석요구, 청문회, 검증, 자료제출명령 등의 주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진상규명 노력에 매진할 것

4.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인재채용국】

- 공무원 실무수습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수당 지급 의무화 등 지급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인사혁신국】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변경 등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개방형직위 감소 및 자율 직위 확대를 감안하여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임용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
- 면접시험 및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법령상의 복무의무 준수 및 공개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복무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적격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정직 고위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퇴직 전 저축연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결원으로 보고 충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인사관리국】

- 채용 단계에서부터 직무급제를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대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공무원 보수를 정률제로 인상하는 방안에서 탈피하여 정액제로 변경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을 고용노동부의 6+6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건교사 교직수당 인상에 대해 검토할 것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영양교사를 포함시키고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약무직공무원에 대한 의약품안전관리 가산금 지급에 대해 검토할 것
- 소방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방안을 강구할 것
- 공무원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무원 출장 시 적립된 KTX 마일리지 관리 규정이 없어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기한 만료로 소멸되는 상황인 바 대책을 강구할 것

【윤리복무국】

- 감사원의 조치 사항 통보가 있었던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이 정부 산하기관장 후보자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재심사 절차를 통해 취업 승인을 취소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것
-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중앙회에 대한 취업심사제도 관련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겸직 심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도를 보완하고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9개에 달하는 예외 규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무 관련성 없음’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음’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

5. 경찰청

- 경찰공제회 이사장, 감사 등 주요 이사직이 장기 공석 상태이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 계급별 인력 불균형 등 경찰 인사조직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생계형 상습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공수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및 간첩 활동 증가로 인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영등포경찰서의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 직원 연루 가능성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할 것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관들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수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능범죄의 검거율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첨단 수사기법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 쿠광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내부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할 것
- 퇴직 경찰의 쿠광 고위직 취업과 블랙리스트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 쿠광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7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므로 제보자들에 대한 편파 수사 중단 및 쿠광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 기자명단 유출 수사 관련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필요
-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 경찰공제회 임원의 공석 장기화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 탄핵기금 모금 등 기부금 불법 모금 사례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
- 해외주재관 파견 추천 철회 등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복 조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일선 직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소신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직위해제 조치와 서울청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 수서경찰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원칙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국민들이 수사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지휘관을 배치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마약 간이검사 키트 사용을 확대하고 마약검사 의무화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1인 시위에 대한 부당한 방해와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부당한 결정을 내린 당사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
-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경찰 증원 인력 중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인력 및 성별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할 것
- 대공수사 전담 원년을 맞아 국정원·방첩사 등 안보기관과의 협력 강화 계획을 추진할 것
-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대북전단·오물풍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부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하여 부실수사 여부를 재조사하고 고의적인 수사 은폐나 부실수사가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 교제폭력 신고 사건이 쌍방 폭행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경찰의 현장대응 및 수사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할 것

-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 조직 강화, 위장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전문성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
-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
-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과 관련하여 국민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
-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의 통합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것
-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관련하여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위험 운전자를 판별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것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오송 지하철도 참사와 관련하여 유가족 지원,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생계형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조치 마련할 것
- 선거 출마 후보자의 상습도박 의혹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
- 유튜브 실시간 도박 채널이 제재 없이 운영되어 청소년들이 불법대출, 절도, 성매매 등 2차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국제협력 강화, 플랫폼

과의 협조 등 전방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적절한 수사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부담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집단 괴롭힘 사건 직권퇴교자 중 재입교한 사례 관련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데이트폭력·성범죄 수사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것
- 정보경찰에 대한 장기근무 인센티브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찰공제회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공익신고자가 제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기재했다는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공익제보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 및 징계 절차를 이행할 것
-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의 구조적 개선과 대책을 수립할 것
- 무인점포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협회 및 점주들과 협력하여 절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찰의 신발 조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 및 재조사를 통해 계약 방식 변경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
- 북한 이탈주민의 대북송금 수사 관련하여 북한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송금한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사할 것
- 112신고시스템 내 교제폭력 관리 기능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경찰관들의 헌신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 무면허 대리 수술 사건 관련 미흡 및 지연 수사 논란이 없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줄 것
- 경찰의 자산 매각이 무계획적이고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관련 계획과 평가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것
- 폐지된 파출소에 대한 안내 및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치안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집회·시위가 많은 경찰서는 집회·시위 관리 기능을 경찰서에서 분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 진척 상황에 대해 점검할 것
- 경찰관의 영리 검직 사례가 최근 들어 큰폭 증가 추세이고, 이해충돌 가능성도 높아 보이므로 검업 허용 및 관리 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수사 단계별 공보 수칙을 명확하게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할 것
- 수사 단계별 공보 수칙을 명확하게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할 것
-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전국적 통합수사를 추진할 것
-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
- 노후된 테이저건 비율이 높으므로 국산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촉법소년 범죄 증가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경찰관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할 것
-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태조사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중국산 CCTV와 관련한 보안 문제가 제기되므로 신속한 교체를 추진할 것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원칙대로 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한국형 경찰장비 국산화와 신규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
-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자율운전 면허제 도입을 검토할 것
- 고령운전자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명태군씨의 공천개입 및 뇌물죄 의혹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할 것
-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경호시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세관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
- 권력자의 심기 경호를 위한 공권력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내사·수사를 실시할 것
- 불필요한 과잉 수사를 지양하고 신중한 수사 방식을 마련할 것
- 키스 시스템 개선 등 경찰 수사 통계(현황)을 개선할 것
- 인터폴 미래치안회의, 국제치안산업대전 등을 개최하는 글로벌 치안 선도국으로서 치안장비·시스템 등 K-치안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할 것

-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보행안전 위협 및 도시미관 훼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기동순찰대의 신설 등 경찰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현직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
-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매뉴얼을 개선할 것
- 성인 실종 관련 법률이 없으므로 입법을 추진할 것
- 경찰청장이 현장 경찰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자부심 회복과 사기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 청원 경찰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 및 견인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의혹에 대한 공정하게 수사할 것
- 일선 경찰관의 근무태만 사례에 대한 기강 확립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 협력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의 사건의 불송치 결정 경위에 대한 조사 필요

- 중심지역관서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많으므로 정책 추진을 재검토할 것
-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근거를 마련할 것
- 압수수색의 경우 피의자 인권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지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경찰 내부 감독을 강화할 것
-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호 장치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사 기능에 대한 보강 및 강력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
- 금융노조 집회에 대한 강압적·기계적 대응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한강하구 해도 북한 제공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
- 수사사건 심의 과정에서 신청인 조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수사 사건 심의 규칙’을 개정할 것
- 준강간 범죄에 있어 디지털성폭력 피해 등 추가적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적극적인 초기 수사를 진행하고, 신체를 통한 약물검사 외에도 다양한 증거 확보 절차를 모색하며 증거확보에 따른 유형별 통계를 구축할 것
- 경찰 차원에서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적용할 것

-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의 수사 전 과정에 있어 성별 구분 통계를 구축하고,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강력범죄에 있어 관계유형별 통계를 구축할 것
- 우범소년 규정을 보충적·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와 일선서에 명확한 지침을 하달하고, 선도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해당 의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할 것
- 대마 밀경에 대한 단속 강화 및 대마 씨앗 수입이 가능한 해외사이트들의 차단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
- 경찰청 차장은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권 장악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전달해 줄 것을 당부
-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피기금) 예산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사업 규모도 확대할 필요
- 검찰-경찰 간 이원화 되어 있는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사업을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서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
- 이용자가 없는 검찰의 안전가옥 사업을 경찰청의 임시숙소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필요
- 현행 인사위원회가 경찰공무원 내부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승진 청탁, 뇌물수수 등 인사의 구조적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할 것

6. 소방청

- 지방소방본부의 3급 부장 직위 신설 및 인천, 경기, 경북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
- 중앙119구조본부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소방청 차원의 특별감찰 및 복무감사를 추진하고,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
- 리튬배터리 및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소방청의 종합 대책 추진 및 대응기술 개발 R&D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에 대한 소방청 인증기준을 마련할 것
-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 애플 측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플 측과 협의할 것
- 구급상황관리 통계에 ‘이송요청 건수’ 통계를 추가할 것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평가 등급, 점수, 종합평가 의견 등 근무성적을 공개하고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 의무소방원 제도 폐지 및 의료대란 이후 구급대원의 업무량이 증가했고 3인이 근무하는 구급차의 운행률도 88% 수준으로 떨어졌음. 소방청은 현장 구조구급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방인력과 소방관서를 소방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시도소방본부 상조회의 운영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전남상조회·광주상조회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방용품에 대한 내구연한 제도의 순차적 도입 방안 마련할 것
-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업 소방공무원의 식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소방공무원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직업성 질환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보건 환경을 조성할 것
- 119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예방 방안 및 사후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국립소방병원이 계획대로 2026년에 개원할 수 있도록 의료진 인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및 전담 의용소방대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
- 소방의 국가직화 취지에 맞게 소방장비는 전액 국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강화할 것
- 소방청은 고층형(5층 이상) 공기안전매트 인증 검토 시 안전성 보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이행완료 연기신청이 법령 요건을 벗어나 과도하게 허가되지 않도록 하고, 이행완료 후 현장확인 등 예방행정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7. 지방자치단체

가. 서울특별시

- 한강리버버스와 관련하여 교량 기준 등 안전 진단을 실시할 것
- 한남 뉴타운 재개발 지역 내 유기동물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 미해산 및 미청산 재개발·개전축 조합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시 발주 공사에서 하도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전수조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재개발 중단 지역의 빈집과 무허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구단·연맹·협회 및 선수, 관객들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암 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서울교통공사 감사의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사용 사례가 드러났는데, 전체 산하기관 대표 및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여 조치할 것
- 전차인 영업권 보장 등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불법전대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지하연계 복합건물과 관련하여 제도적 미비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 IM 택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차량 대수를 확대하는 한편, 급여 지급 문제, 노사관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불법전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체매립지의 조속한 선정 등 수도권 매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강 수상구조물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싱크홀 및 포트홀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탐지와 점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제3차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및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과 별개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것
- 지하철 2호선 1인 승무제 추진 계획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방재안전직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도심내 MFC 허용 관련 안전조치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및 제도 오용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
- PM 부당 견인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무면허 PM 운전을 근절하고 무분별하게 방지되는 PM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강남역을 포함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빗물배수터널 사업 착공 지연에 따른 대책 수립과 조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방공무원 급식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시·구비 매칭사업 관련 최근 2개연도 동안 계속 서울시 매칭 비율을 줄여 온 사업이 20개에 달하는 바,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
-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활동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벗어나는 주민번호 수집 조항이 있는 바 개정을 검토할 것
- 서울시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 서울시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위기임신 상담체계를 구축할 것

- 아파트 공기안전매트 관리 실태를 전수 파악하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
-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 차원에서 이뤄진 감사결과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서울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이 공공개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할 것
- 2021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허위신고 과태료 처벌 규정 신설 취지에 부합하도록 허위신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대응할 것
-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원활한 병역 이행과 공정한 병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무요원 수요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도심 내 불법 택배시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공항철도-9호선 직결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

나. 부산광역시

- YS민주역사기념관 건립과 명칭 관련하여 시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것
- YS민주역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기술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에서 기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마련을 검토할 것
- 서울시 해외 가사도우미를 벤치마크하여 해외 돌봄인력을 수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부산 원도심 빈집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서 업무 전문성 및 해당 분야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할 것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 3. 27.)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 전담 부서 구성 등 충분한 준비를 할 것
-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진행 중인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 윤석열 대통령의 부마항쟁 기념식 참석과 부마민주항쟁 헌법정신 수록, 기념관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할 것
- 윤석열 정부의 부산 공약 이행을 저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향후 부당한 병원 헬기 이송 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아시아드CC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부산시가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

- 부산엑스포 기념품 선정 관련하여 시립미술관의 추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해외홍보 부족 등 부산엑스포 홍보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할 것
-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유공자 포상 대상 선정이 부적절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할 것
- 연제구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부산 시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영도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제한 폐지, 롯데백화점 앞 BRT 차선 설치로 인한 시민 안전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 삭감을 고려하여 재정 자립도 낮은 자치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노력할 것
- 기장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원자력산업 관련하여,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울경 광역철도’ 및 ‘정관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철마근린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
- 강서구에서 적발된 불법 번식장 외에 다른 곳에도 불법 번식장이 없는지 철저히 단속할 것
- 55보급창(범일동 블랑서밋74 부지) 환경오염에 대해 정밀조사 방안을 마련할 것
-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복기를 위해 대흥기획의 완료보고서의 타당성 분석 등 철저히 점검할 것
-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및 청년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하단역에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적극 검토할 것
- 풍피두 부산 분관 유치와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기획전을 하는 것도 검토할 것
- 싱크홀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상지역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시행할 것
- 마리나클럽하우스와 북항재개발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통망 구축 등 부산시의 협력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자체예산으로 충당해서라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립치유의 숲을 활용해 주변부를 관광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동부산의 50+복합센터처럼 서부산권에 50+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

다. 광주광역시

-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군 공항이전 등에서 시·도 간의 불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태도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
-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광주와 전남이 대화 협력을 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광주와 전남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5·18 정신을 한마디로 응축해 낼 수 있는 연구의 실시를 검토할 것
- 5·18 민주화운동 보상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상이자 보상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수배자·해직자 및 강제징집자에 대해서는 민주화보상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
- 광주광역시가 해직 언론인에 대한 5·18 민주화운동 보상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데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력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수, 학생이 유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포용적인 문화와 지원책 강구할 것
- 광주광역시의 육아휴직 대상자인 남성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 구상할 것
- 고향사랑기부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서 중요한 사업이므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소하천 정비사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이 열악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크골프장의 반복적인 복구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규로 조성하는 파크골프장의 부지 선정, 배수·방재시설 설치 시 기후변화 및 집중호우를 고려할 것
-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
- 철거 후 다시 시공중인 화정동 아이파크와 관련된 민원을 꼼꼼히 확인할 것
- 개인이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소급적용할 것
- 소방청은 노후 공기안전매트를 전수 교체할 계획인데 공기안전매트의 표준이 없으므로 교체과정에서 실성능 검증을 선행할 것
- 아파트의 공기안전매트 관리실태를 전수 파악할 것

- 5층 이상의 고층형 공기안전매트 등을 활용한 구조 작전 시 충분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훈련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화재 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급감한 채 정체되고 있는데,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을 마련할 것
-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거의 구성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내부위원만 위촉하고 본부 계획의 형식적 의결 등 유명무실화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실태를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독려할 것
- 소방급식과 관련한 조례에서 급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소방급식의 질을 높일 것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확충을 위해서 재난안전 부서 근무 경력자 등을 중심으로 직렬 전환 및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방재안전직의 특정 비율 채용 의무화 또는 복수직화를 확대하는 등 방재 안전직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방안을 보완할 것
- 정부가 2024년 5월에 발표한 계통포화 해소 대책 중 2031년 말까지 호남·제주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정부가 이 조치를 빨리 철회하게끔 하는 노력할 것

- 광주광역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할 것
- 광주글로벌모터스의 1대 주주인 광주광역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그 과정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설명할 것
-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사갈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광주형일자리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인 논의와 심의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 노점상뿐만 아니라 노점상 인근의 자영업자 의견을 함께 경청하여 노점상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뿐만 아니라 위생점검과 계도 등을 통한 합법화 추진 등을 검토할 것
-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창업 과정을 만들거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회적 경제 창업 트랙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 사업을 보완할 것
- 광주 서구청 2청사 건립 계획 추진 과정에서 건물 매입 후 법적 분쟁, 건물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발생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은 건물 매입전 부지 선정과정에서 확인되었어야 하는 사안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의 문제를 확인하고, 업무소홀과 예산낭비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실시할 것
- 광주광역시가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효과에 대해 용역을 추진할 때

광주 소상공인들은 1개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평가를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광주시와 소상공인이 효과에 대한 토론회의 개최를 검토할 것

- 광주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첨단 3지구 조성사업의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A5블럭에 96세대가 증가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조치를 진행할 것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유적발굴 관련 경과, 조치 내역, 유물 출토 지도를 제출하고, 광주 중앙공원1지구 조성 사업부지에서 조사발굴단이 제안한 유물의 추가 발굴을 시행할 것
- 광주축구센터 축구장과 축구전용구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강공사 등을 실시할 것
- 남은 아시안챔피언스리그 경기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를 수 있도록 광주 월드컵경기장의 잔디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
- 광주광역시는 은닉자산 추적을 통한 압류 등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 행정이 필요하고,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
-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으면 세액공제 등을 더 많이 해주는 방안, 종이고지서를 필요로 하는 고령층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을 검토할 것

라. 울산광역시

-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전시성 홍보 성격이 강한 사업이 많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 울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이 미진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최근 3년간 울산 남구가 과밀화되어 교통, 교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울산시의 용수 확보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울산시의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으므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울산시 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일·가정 균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
-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민사회와도 협의하여 용수 확보 문제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LNG 터미널, 가스전 개발사업 등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울산 산업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 울산시 차원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산업단지 내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울산시 내 분산에너지 특성화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등 외국인력을 활용 가능한 비자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
- 삼산·여천 매립장을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기보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고유의 특색을 살려 국제정원박람회와 조화되는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울산시에서 추진한 공업축제에 공무원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토할 것
-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5개 기초 지자체가 모두 조례,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울산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마련할 것
-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여 잉여금 및 불용 예산을 감축할 것
- 국립예술단체가 2년 연속 울산시 내 공연 실적이 전무하므로 문체부와 함께 국립예술단체 공연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내 공인노무사가 채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지청 내 공인노무사 처우 현실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

마. 경기도

- 대북전단 살포 관련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대남방송 송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고려하여,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남북관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서해공무원 피격,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행동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것
- 남양주시·김포시 공무원 자살과 관련하여,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부당한 인사 카르텔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것
-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관련하여 17번 국도 영동고속도로 연결 사업, 경강선 연장사업,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
- 경기남부 반도체 공대 설립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
- 성남FC 사건으로 인한 김경수 사무관의 직위해제 중지 조치를 검토할 것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유지·확대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 누구나집 정책의 사업성 및 청년·신혼부부 우선분양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모색할 것
- 경기도 병무담당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 금액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저조하므로 인상을 위해 노력할 것
-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대체매립지의 조속한 선정 등 수도권 매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사당역 경기버스라운지의 이용객 대비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것
- 양평 공룡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에너지이용합리화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는 10위 수준이므로,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기후대응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별내선 열차 증차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경기국제공항이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용인시 등에 위치한 장애인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것
- TBS 인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위기임신 상담기관의 상담내용이 보다 체계적·포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기후보험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다른 제도와의 중복 소지를 확인할 것
- 기후펀드 제도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완화 관련한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라 규제내용이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변경사항을 적용할 것
- 경기도 내 공공요금의 기초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므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전자고지 비율이 제고되도록 고지서 전자송달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내용에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건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 서울특별시의 버스 폐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조정 신청을 하거나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적절히 대응할 것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시철도 이용 시 타고 내리는 방향표시를 개선하여 혼잡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일자리 매칭업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도지사 또는 부지사의 청년기구회의 참석율을 제고할 것
-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에 있어 경기도의 매칭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도내 치매안심병원이 재정위기로 운영을 포기하는 등 적자 문제가 심각하므로 병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공공의료원의 적자 및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므로 대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평가 시 공공의료 분야의 경우 공익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항목에 반영할 것
-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
- 소하천 정비사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3판교 성공 위해 기업유치와 함께 임직원들의 주거·보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병행할 것
- 8호선 모란차량기지~판교역 연장 사업의 조속 추진 필요한 바 경제성 평가에 인구수 이외 판교의 경제적 가치 및 확장 가능성을 반영할 것

- 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도춘역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을 미리 실시설계에 반영할 것
- 경기도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위기임신 상담체계를 구축할 것
- 경기도 차원의 성·재생산권리보장 기본조례 제정,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할 것
- 도내 위기임신 상담기관이 임신중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매뉴얼을 마련할 것
- 평택소방서 119구급대원이 HIV 감염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종용받은 사건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HIV 감염인 차별 및 공무원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청구한 재판비용을 감면할 것
- 3000번 버스 증차 및 노선 급행화 위해 적극 협조할 것

바. 충청북도

- 충청북도 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명절선물 구입에 사용하는 문제를 시정할 것
- K-바이오 스퀘어 관련 성과 확보를 위해 의료 인재를 확보하고 및 산·학 연계 생태계를 구성할 것
- 충청북도의 화재 현장 골든타임 내 도착비율이 저조하므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충청북도에 소방학교가 없어 전문교육을 매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시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은행에만 예치하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충청북도 내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오송참사 관련 시민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충청북도의 재난방지 대책을 추진할 것
- 제천 화재 관련 피해자 지원방안 더욱 세심하게 검토할 것
- 행정정보 공개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소방을 포함한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해 재원확보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을 검토할 것
- 충청북도 출연기관 성과급 지급기준이 행정안전부 지침과 다르므로 충청북도의 기준을 기관에 통보 또는 행정안전부 기준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청남대 방문객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
- 오송 참사 피해자에 대한 청주시의 동의 없는 의료정보 수집 의혹이 있으므로 시정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할 것
- 재난 상황 발생 시 지휘체계 개선을 검토할 것

- 충청북도 소방서 급식단가가 최하위 수준이므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충북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교수진, 강의실 및 교육시설 등 차질없이 준비할 것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이 미수립된 상황, 우수저류 시설 기준 및 배수펌프장의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
- 소하천 정비사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이 열악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군별 공공요금 및 행정수수료 편차에 대해 점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 전자고지 비율이 제고되도록 고지서 전자송달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충북혁신도시 통합관리기구를 모색해 2개의 생활권으로 조성된 도시 주민들의 주거 생활 및 행정이용 서비스 불편 해소에 조속히 나설 것
- 충청북도의 공동주택 화재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와 소방안전본부는 준공 당시 설치 의무가 부재했다는 이유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 충청북도와 소방안전본부는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및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준의 사업 조직과 예산 규모 유지를 검토하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사회적경제 창업 트랙 신설을 검토할 것
-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비롯하여 기후정책, 재생에너지정책의 자체 사업 비중을 확대할 것
- 오송참사 당시 충북소방의 문서조작 혐의에 대해 혐의 당사자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충북도는 공식 사과할 것
- 오송참사 관련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백서를 제작할 것

사. 전라남도

- 전라남도가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2호기와 관련된 주민 합동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한전공대에 대한 전라남도의 지원을 철저히 검증하고, 한전공대 예산 편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이 미수립된 상황, 우수저류 시설 기준 및 배수펌프장의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
- 안전센터 및 소방서의 근무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급식지원 금액 규모에 대해 점검하고, 급식 개선문제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한우농가에 대한 가격 인상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곡성 강빛 전원마을을 정비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가 관심을 가질 것
-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대응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농정당국에 대한 대응과 시장격리 및 추가매입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및 지원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
- 시·군별 공공요금 및 행정수수료 편차에 대해 점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 염전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관리 문턱을 낮추고, 소유자가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마련할 것
- 전남소방본부 공조회 기금고갈로 인한 갈등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남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원전보다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특화 산업전략을 적극 고민할 것
- 재생에너지 수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모델을 전라남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

- 전라남도 차원의 여순사건에 대한 시군별 조사현황 파악, 관련 조사관 충원, 실무위원회 정상 운영 등을 통해 여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

아. 경상북도

-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 해결을 위해 부지 이전 관련 로드맵이 필요한 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대구·경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적법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각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향후 계획을 보고할 것
-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통합이 주어진 시간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2026년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
-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할 것
- 대구·경북 영어마을의 보조금 이중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반환조치를 통한 정산 외에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및 행정처분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자.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구역 분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할 것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갈등관리를 실시할 것
- 행정체제 개편 후 지역 격차를 완화하되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재정 분배 방안을 고안할 것
-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자치-교육자치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도지사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통합형 도입을 검토할 것
- 청년 주거 복지 및 일자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제주도 주민생활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제주도 여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관광지 물가의 상승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싱가포르형 렌터카 쿼터제를 병행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평화대공원 사업에 관한 계획을 국회와 함께 논의할 것
- 야간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제주관광청 신설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제주도 불법 숙박시설 감독·단속·수사를 강화하고, 세무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것
- 불법 숙박시설 운영에 따른 숙박 시장 교란 및 이용객 안전 문제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문다혜 씨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할 것
- 농어촌 민박 위생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노키즈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사고 정책보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양육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할 것
- 외국어 상호 간판을 규제하고, 한글을 우선 사용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할 것
- 공무원의 행사 동원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범죄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 기마대 소속 말의 안락사 실시 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 자치경찰 기마대 소속 말의 은퇴 후 퇴역 경주마 휴양목장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마대를 제주마(馬)로만 구성하여 행사 지원 전용으로 활용하거나, 기마대 폐지 후 승마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026년 전국체전 개최시 승마경기를 실시하기 위하여 승마장 규격 미달 문제를 보완할 것
- 화재안전조사 실시율 및 결과 공개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보 등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노후 공기안전매트 전수 교체시 실 성능 검증 절차를 이행하고, 아파트 공기안전매트 관리 실태를 조사하며, 고층형 공기안전매트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절차를 마련할 것
- 소방 급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
- 플라스틱 제로 정책 등 환경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
- 추자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반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인력·예산 확충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정부의 4·3 사건 왜곡 발언자 인사 단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해외교과서의 제주도 영토 표기 오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응 경과를 보고할 것

- 제주개발공사 사장 교체를 검토할 것
- 공공기관 2차 이전시 제주 혁신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을 마련할 것
- 제주대학교 서귀포 글로벌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제주도-제주대학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주대학교에 대한 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버스노선 개편 이후 제기되는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제주도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할 것
- 결식아동 급식카드 사용처가 마트·편의점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통합돌봄 사업 서비스 혜택이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에 집중될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할 것
- 지자체 대면 전시임무교육 이수율을 100%까지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
- 김만덕상 선정 배경 및 사유를 공개하고, 선정과정 검토 후 필요시 선정 취소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노동자 사망 사고 수사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수 점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제주시 및 제주시장의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임신중지 상담 매뉴얼을 제작하고,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
- 전자송달 시 세액공제 확대, 지방행정 서비스 개선 등 전자고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공동주택의 소급적용 및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로 책정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현행 수준 유지를 검토할 것
- RISE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트랙 개선을 검토할 것

8. 공공기관

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연이은 적자와 재정악화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검사수수료 산정 방식 개선, 정부 출연금 보조 등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경남 거창군 승강기 시험타워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
- 승강기 부실점검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종합정보망을 새롭게 점검하고, 점검 기준 조정 및 처벌 강화 등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
- 신축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최신 안전기준이 아닌 과거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 및 소방활동을 위한 비상통화 시스템이 승강기에 탑재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것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공원 안장 공간을 확대하고 안장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법정 권고율을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 인력 충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제삼자 변제안 공탁을 즉시 중단할 것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법정 권고율을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 인력 충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마.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의 출산준비용품 지원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출산 장려 정책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간 방치된 무수익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바. 한국도로교통공단

- 신설되는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하여 자율주행 트랙을 설치하여 면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9.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가. 서울경찰청

-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 수사가 보궐선거를 고려해 지연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시세조종 의혹 수사가 지연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실시할 것
- 성비위 혐의자가 현장 근무를 지속하는 등 조직 내 성비위 사건 처리가 부적절하므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것
- PM 무면허 운전과 무인점포 절도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여업체 관리와 방법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치안대책을 마련할 것
-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면서, 쿠팡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사건은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수사의 형평성이 문제되므로, 공정하고 균형있는 수사를 실시할 것
- 방심위원장과 대통령 관련 사건은 소극적으로 수사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등 편향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수사를 실시할 것
-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채증한 현장 자료를 임의로 취사선택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교체를 통해 증거를 소실하는 등 증거물 관리가 부실하므로, 채증 영상의 촬영·보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시 통상적인 교통관리가 과도한 통제로 왜곡되어 정쟁화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것
-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시 불분명한 지시계통과 교통통제, CCTV 영상 제공 거부 등 투명성이 결여되었으므로, 경호 활동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서울 관내 아파트의 경찰 출입용 폴패스 설치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저조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10개 이상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 계속 발생하는 등 제도운영이 미흡하므로 개선할 것
-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은 추석 연휴 직전 퇴근시간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방문이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찰발전협의회의 운영 부실 관련하여, 강남 3구는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거나 회의록이 없고,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남성 83.7%)과 직업(기업 임직원, 자영업자가 절반 이상)에 편중되어 있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김건희 여사의 한강경찰대 방문 시 공식적인 경호 요청이나 공문도 없이 교통신호기를 조작하는 등 과도한 경찰의 경호 조치와 및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로 일관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남대문경찰서와 수서경찰서 간 맥신 쿠 관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관할권 침해 및 부적절한 수사 개입이 있었고, 유 경감과 백 과장의 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관련 사건의 진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 금융노조 집회 확산기등 일시보관조치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다치는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집회 관리와 국방부 종합민원실을 군사보호 시설로 잘못 판단하여 시민 민원제출을 제한한 사례에 대해 앞으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회관리 할 것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대상자의 이동시 교통관리 및 안전 확보 조치는 경찰의 기본 임무이므로, 관련 조치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
- JMS 관련 '나는 신이다' 제작 PD 수사과정에서 여청과가 아닌 수사과에 배당하고 류희림 사건의 경우 수사 인력 불균형 등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철저히 하고 균형 있는 수사를 실시할 것
- 영등포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전 관세청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복귀를 검토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할 것
- 금융노조 집회에서 현장 위험성 보고와 국회의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확산기등 일시보관조치를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할 것
-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수사2팀이 주민 치안을 위한 공간인 영등포구 신길동

초소를 사용하고 있어 주민 불만이 높으므로, 통합청사 이전 후 해당 공간을 주민 치안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경호 대상자 이동 시 상황에 따른 순간적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교통관리’로 표현한 것이나, 용어 선택의 모호성으로 인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대북전단 문제 등에서는 경찰력 행사를 자제하면서도 평화로운 집회에서는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만큼, 기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나. 부산경찰청

-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장 증거 보존 및 대응 미흡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설명 필요
- 성범죄, 갑질 등 부산경찰청 내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조직문화를 일신할 것
- 우정 집배원과 협력한 공동체 치안 모델을 개발하고 타 시도에 전파할 것
- 드론 활용을 비롯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치안활동 모델의 지속적 개발할 것
- 교제폭력에 대한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솔루션 협의체 운영

외에 다중기관 위험평가회의 도입, 전문 캠페인 등 혁신적인 예방 및 대응 전략 수립과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법 집행 시 적법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
-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문제에 대해 철저하고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딥페이크 범죄예방을 위한 전문수사팀 운영 및 특별교육을 강화할 것
- 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SNS 운영사와 협력하고, 해외 도피 사범 송환율을 높이며, 청소년 대상 교육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
- 교제폭력 및 교제 살인 예방을 위해 기존 획일적 등급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수립할 것
- 중심지역관서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교통체계 및 운전 환경을 개선할 필요
- 스토킹, 데이트폭력,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등 생활 밀착형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폭력배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할 것
-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경찰청 조직개편에

따른 외사 기능 허점을 최소화하며 체계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 전직 경찰의 범죄자 변호 활동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사관 기피 신청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지구대·파출소의 인력 운영에 있어 현장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사회 밀착형 치안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다. 광주경찰청

- 중심지역관서제 시행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것
- 관할 지역 11개 파출소의 1인 지역관서가 공동체 치안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선할 것
- 광주청 관할 촉법소년 범죄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학교 전담경찰관의 담당 학교 수가 과다하므로 적정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시민 체감안전도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한국시리즈 관련 압표 매매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찰청 내 주차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공간 확충 등 직원 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광주지역 내 관계성 범죄(교제폭력, 스토킹 등)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 현장 경찰관의 관계성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체계를 확립할 것
- 여성·청소년수사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경찰의 정치적 편향 수사는 경찰 수사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할 것
- 경찰관의 음주운전 등 비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시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시청, 구청,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 경찰관 인력 배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인사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 인사위원회가 경찰청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문제를 지적하고 외부 인사 참여, 내부고발 시스템, 계급 축소 등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광주지방경찰청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수사부서의 업무 과중 문제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안전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희망티움 통합지원단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국적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할 것
- 중심지역관서제 관련하여 농촌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치안공백 문제가 크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내실있는 정책 추진으로 치안을 확보할 것
- 직장 내 갑질 신고 사건에 대한 면직 처리 등 미온적 대처를 지양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경찰조직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경찰서 내 보안검색대 설치 등 피의자의 흉기 난동 등으로부터 경찰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강화를 촉구

- 테이저건 내용연수 경과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필요

라. 울산경찰청

- 외국인 범죄 및 마약범죄가 증가 증인데,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 정보수집 등 외국인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가상화폐 사기, 사이버도박, 산업스파이 등 미래형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 양성과 수사의 연속성 보장, 부서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
- KOK 코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딥페이크 범죄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MZ 세대 조직폭력배와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폭력배 전담팀 인력 확충 및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
- 폴패스(공동현관 자동출입 시스템)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안 솔루션 도입 및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할 것
- 울산경찰청 전·현직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 사건 연루자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 및 징계, 로펌으로 이동한 전직 경찰관의 수임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울산경찰청 지구대원 실적 부풀리기, 형사기동대 수사 정보 유출 사건, 병가 중 장기 해외여행, 성범죄 사건 등등 내부 비위에 대해 철저한 징계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을 위해 24시간 운영 정신의료기관 확충, 경찰과 의료진 간 협력체계 구축, 합동대응센터 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묻지마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폴패스(공동현관 출입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주민 설득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용어 선정 등에서 안전과 신뢰를 고려할 것.
- 지역적 특성과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과열 경쟁과 조직 결속력 약화를 부추기는 우수실적팀 특진 제도(현행 베스트팀 특진 제도) 등 획일적인 경쟁 시스템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울산 지역 파출소의 55%가 정원에 미달된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조차 어렵고, 112신고 대응에 위험이 초래되는 등 치안 공백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규모의 운영방안을 검토할 것
- 수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사관 기피 신청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지킬 것
-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접근을 강구할 것
- 0.1%의 극히 낮은 특진 비율로 인한 부작용과 승진 압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승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것

- 범죄예방경찰관(CPO) 인력을 확충하고, 울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 예방 전략을 수립하며, 1인당 담당 인구와 면적이 과도한 지역에 대한 인력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망양골프장의 그린벨트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

마. 경기남부경찰청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의 피고인 회유·압박 의혹과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
- 경기도 내 PM 음주운전 사고가 전국 최다 발생(253건 중 98건)하고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장애인 등의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사전 지문등록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등록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 급증(75만명, 전체 외국인의 33%)에 따른 치안 대책을 강화하고, 외사 기능 폐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P 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된 원희룡 장관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
- 6개월 초과 범죄사건 처리 건수가 증가 및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증가 등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양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방안과 함께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로변 학교 주변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해자 제재조치를 시행할 것
- 특정 수사 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재수사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여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신속히 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 마약사범 검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판매책 중심의 유통망 차단 등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동탄경찰서 성범죄 강압수사 사건과 용인동부경찰서 여중생 전단지 사건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급격히 증가하고 저연령화되는 사이버도박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미고지, 반말 사용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무고한 청년을 성추행범으로 입건한 화성동탄경찰서 사건에 대한 책임자 징계 및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별건으로 분리 수사 중인 사건을 병합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기일 연장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 여중생 전단지 제거 사건 등 과잉수사 방지를 위한 수사지휘 체계를 개선할 것
-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건 등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 병가 중 해외여행 등 비정상적 복무 관행을 개선하고,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아리셀 군납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방산비리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
-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 현장 경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
- 최은순 씨 관련 수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실시할 필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것
-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법집행 과정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바. 경기북부경찰청

-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령(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단속과 수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
-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5530건, 22회)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 고양경찰서 관내 지구대·파출소의 실가용 경력이 부족하므로 인력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휴직·병가자 및 시간선택제 근무자 배치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관련하여,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진돗개 하나급 군사 위기상황이 발생한 전례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에 따른 단속을 강화할 것

-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 보장을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치안대책을 수립할 것
- 고양특례시에 경무관급 서장을 배치하고 파주경찰서 신설 등 경기북부 치안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해자 제재조치를 시행할 것
- 대북전단 수사의뢰 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
- 대북전단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하고, 법집행 시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처리할 것

사. 충청북도경찰청

-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 현행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오송 지하철도 참사 관련하여 112신고 조치 미흡, 근무일지 허위작성, 재난상황실 미운영 등 직무유기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 처벌과 직원들의 허위 보고서 작성과 같은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

하고,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 경찰 수사정보 유출과 장비 관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일선 경찰서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 확보 등 초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법적 보호수단의 적극적 검토와 집행이 요구됨
- 피감기관이 피의자 신분인 도지사를 기관 행사에 초청한 것은 형사피의자에 대한 특혜이자 부적절한 처신이므로,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정대한 자세를 견지하고, 정부 편향적인 업무 진행이나 피의자 신분인 고위공직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차단하여 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
- 경찰의 현장 밀착형 치안 활동을 위해 중심관서·공동체관서 운영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112신고 대응 미흡과 초기 대처 실패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
- 충북청의 사이버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검거율은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므로, 수사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검거 역량을 제고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충북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폭력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방안 수립 필요
-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이양받은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수사 권한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을 촉구
- 충북경찰청의 내부 비위 사례(음주운전, 시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를 언급하며 공직기강 확립과 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 충북 경찰의 살인사건 수사에서의 비상식적 사건 배당 문제(경장이 단독으로 중대 살인사건 담당)를 지적하며 공직기강 확립과 수사체계 개선 요구
- 하수처리장 암페타민 검출 수치와 마약 검거 간 괴리를 언급하며 마약 문제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대응 필요
-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미흡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영장 발부와 압수수색 집행 시 신중을 기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관행을 개선할 것
- SNS 계정 해킹 대응 및 보안시스템 강화 등 경찰청의 정보보안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것
- 중국산 CCTV의 해킹 위험성을 점검하고 국산화를 통해 보안을 강화할 것

아. 전라남도경찰청

- 사이버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수사역량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해외 서버 문제 등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경찰청 전체 차원과 전남도청 차원에서 마련할 것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증가한 상황에서, 관리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인력 확충을 본청에 적극 건의하고 증원을 추진할 것
- 지방 경찰서의 특성상 담당 면적이 넓고(화순, 해남 등) 대상자 거주지가 산재해 있어 관리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5년간 기소된 전남청 경찰관이 82명으로 18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점을 볼 때 공직기강 확립과 소속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점검 대책을 수립할 것
- 중심지역관서제 운영(92개소)으로 인해 농촌 지역주민들이 경찰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중심지역관서제의 효율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축산물 수확기를 맞아 절도 등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예방계와 형사계가 협력하여 더욱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
- 무인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무인 점포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승진 시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례를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할 것
-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특정 정권이나 사안에 편파적이지 않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시행할 것
-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의 수사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전직 경찰관의 행인 폭행 사건 보도 관련 현직 경찰관의 기자 겁박 사건에 대해 엄중히 감사를 시행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
- 나주경찰서에서 발생한 외국인 피의자 도주 사건과 같은 업무 방만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체계를 재정비할 것
- 본청에 적극적으로 외사안전지구대 설치를 건의하고 특히 학산파출소 폐쇄로 인한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용당리 지역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 설치를 추진할 것
- 전남 199개 섬에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도서 지역 치안 소요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 완도경찰서의 ‘한달음선’ 운영(26개 민간 선박 선정)을 신안 등 타 도서 지역으로 확대하고, 출동 소요시간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도서 지역 치안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나주경찰서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 도주 사건, 살인사건 피해자 신상

관련 보고서 유출 사건 등 공직기강 해이와 내부 보안시스템 붕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경찰조직 신뢰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 전라남도의 고령자 교통사고 유발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만큼,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와 적성검사, 치매 검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버스노선 증설 등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할 것
- 272개 도서지역 중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섬 지역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한交通安全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 징계대상자가 지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엄격한 기준에 맞는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사자료 유출(박대성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
- 현행 인사위원회가 총경 이상 내부 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5~7명)되어 있어 인사 청탁의 구조적 문제가 있으므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중심관서제 운영이 자치경찰제 시행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한 전남경찰청의 입장과 향후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 조치 계획을 제출할 것
- 완도경찰서에서 압수물 현금이 절취된 사례와 관련하여 압수물·증거물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관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전국 최초로 실시 중인 민간인 수색활동비 지원 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 및 재해보상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 복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수사관행 근절을 위해 피해자 보호 의무 준수, 해당 수사관 인사조치, 불송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 온라인 도박의 심각한 피해사례를 고려하여, 도민 대상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시행할 것
- 전남청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실질적 대응이 미흡한 만큼, 전담팀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할 것
- 수사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경찰 의견 미제시, 반대 당사자 진술 기회 보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
- 국감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음주운전 비율 등 경찰 기강 해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 필요
- 해남·완도 계절 노동자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브로커 등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농어촌·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중심관서제 운영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우려되므로, 전남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

자. 경상북도경찰청

- 채 일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외압 및 수사기록 조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
-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채 일병 사망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독도경비대 전력공급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며 독도경비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채 일병 사망 사건 수사에 있어 경찰청이 독자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했음을 확인하고 법리적 판단의 정당성을 입증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점검할 것
- 채 일병 사망 사건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
- 채 일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이첩 절차상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자 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지역 치안 현장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
- 채 일병 사건과 관련 수사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 수사경과 부여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경찰서장 추천 비율이 전국 평균(31%)의 두 배에 달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것
-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차. 제주경찰청

- 병가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찰관들에 대한 솜방망이식 징계와 제보자를 색출·조사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한 만큼,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준수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출할 것
- 범죄의 국제화·비대면화·익명화 추세를 고려하여 사이버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제주 지역 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
- 타 지역 대비 적은 인력 규모에도 성폭력, 주취 폭행, 음주운전 등 다양한 비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의 경우 신고 대비 적발률이 13.25%에 불과하여 경찰력 낭비가 우려되고, 과도한 신고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 필요
- 외국인 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사과 폐지로 대응이 소홀해진 만큼, 본청에 외사과 신설을 적극 건의 필요
- 기동순찰대 인력이 타 지역에 비해 과다 배치되어 일선 부서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기동순찰대 폐지 또는 인력 감축을 검토할 것

- 자치경찰제의 입법 취지인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심지역관서제도 시행을 보류하고, 치안센터 13개소의 현행 유지 등 주민 밀착형 치안 행정을 지속할 것
- 제주도 내 법의관 및 부검 시설 부재로 인해 신속한 부검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과수와 협의하여 제주도 내 연구소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도 내 13개 치안센터 중 다수가 상주 인력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범죄 발생률 1위인 점을 고려하여 치안센터 존치 시 상주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치안 강화 대책을 수립할 것
- 폴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빅워크 협약 추진과정에서 걸음 수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고, 민간업체 앱을 통해 경찰관의 실시간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보안상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정책 추진 시 신중을 기할 것
-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하고 관광객과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범죄예방 인프라가 부족하고 도심에 치중되어 있어 외곽 지역에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기동순찰대 설치(98명, 전체 인력의 4%) 후 112 신고가 감소했다고 하나, 일선 경찰 설문 조사 결과 88.2%가 불만족하고 현장인력 감소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치안대책을 수립할 것

- 성남FC 사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압수수색 실시, 불송치 사건의 검찰 송치, 이후 이례적인 치안감 승진 등 일련의 과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만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
- 제주청 압행순찰차 2대가 단속 장비 없이 운영되어 과속단속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본청에 장비 도입을 건의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를 구축할 것
-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허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므로, 과속카메라 설치 확대 등交通安全 대책을 강화할 것
- 연간 300건 이상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객 대상 캠페인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508건 적발 중 58건만 포상) 홍보를 강화하여 단속 실효성을 제고할 것
-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 사망 사건 관련, 제주시 관계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실수사이므로 재수사할 것
- 불법 촬영 사건 피해자 다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서류 전달이 아닌 구체적인 지원 절차 안내와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것
- 파출소장 근무 중 음주, 동료 여경 성폭행 시도 경찰관의 시민 추행 등 제주 경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할 것

- 제주도가 전국 시도 중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와 강제추행 건수가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관광도시 이미지 회복을 위한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 테이저건 사용 건수가 저조하고 경찰관들의 법 집행이 소극적인 만큼,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치안력 강화를 도모할 것
- 제주 불법체류 중국인이 1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외사계 신설과 외사자문협의회 재구성을 검토하고, 시민감찰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경찰비위 예방을 강화할 것
- 제주청 소속 경찰관의 기소자 수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경징계 위주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
- 암행순찰차에 대한 단속 장비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 이므로, 본청에 예산 요청 등을 통해 필요한 장비를 조속히 확보할 것
- 교통사고 현장 이탈 후 허위 신고한 가해자의 주장만 고려해 뺄소니 혐의 제외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재수사 필요
- 제주도의 고위험 음주율과 주취폭력 범죄율(18.5%)이 전국 평균(13.6%)보다 높은 상황에서, 상습 범죄자 모니터링과 재활치료 등 체계적인 주취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체감안전도가 전국 최하위인 만큼, 경찰-자율방범대 합동순찰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

- 제주도 불법체류자 1만명 중 상당수가 밀입국을 통해 유입되어 절도·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만큼, 중국 공안과의 협력 강화 등 외국인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중국인 관광객의 미풍양속 저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해안경계 강화를 위해 TOD 보완과 드론 활용 등 치안 인프라를 확충할 것
- 빅워크 행사가 종료된 만큼, 민간업체 앱이 설치된 경찰관들의 휴대폰에서 해당 앱을 전원 삭제할 것
- 제주 내 부검의 상주를 위해 의사 파견 요청 또는 지역 병원과 협의를 통한 인력 충원 방안을 검토하고, 30년 이상 된 서귀포경찰서 청사 신축 관련 의견을 제출할 것

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타. 새마을운동중앙회

파. 한국자유총연맹

VII. 증인 및 참고인 현황

1. 기관증인

가. 기관증인 총괄

연번	대 상 기 관	기 관 장	증인 수(명)	비고
1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이 상 민	24	
2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사무총장 김 용 빈	16	
3	진 실 · 화 해 를 위 한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광 동	7	
4	인 사 혁 신 처	처 장 연 원 정	13	
5	경 찰 청	청 장 조 지 호	28	
6	소 방 청	청 장 허 석 곤	9	
7	서 울 특 별 시	시 장 오 세 훈	45	
8	부 산 광 역 시	시 장 박 형 준	41	
9	광 주 광 역 시	시 장 강 기 정	41	
10	울 산 광 역 시	시 장 김 두 겸	29	
11	경 기 도	도지사 김 동 연	49	
12	충 청 북 도	도지사 김 영 환	28	
13	전 라 남 도	도지사 김 영 록	35	
14	경 상 북 도	도지사 이 철 우	33	
15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도지사 오 영 훈	44	
1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 장 황 종 성	1	
17	한 국 승 강 기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양 의 모 직무대리	1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사 장 이 재 오	1	
19	일 제 강 제 동 원 단 피 해 자 지 원 재 단	이 사 장 심 규 선	1	
20	공 무 원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김 동 극	5	
21	한 국 도 로 교 통 공 단	이 사 장 서 범 규 직무대행	5	
22	한 국 소 방 산 업 기 술 원	원 장 김 창 진	4	

연번	대 상 기 관	기 관 장	증인 수(명)	비고
23	서 울 경 찰 청	청 장 김 봉 식	12	
24	부 산 경 찰 청	청 장 김 수 환	22	
25	광 주 경 찰 청	청 장 박 성 주	17	
26	울 산 경 찰 청	청 장 정 상 진	17	
27	경 기 남 부 경 찰 청	청 장 김 준 영	26	
28	경 기 북 부 경 찰 청	청 장 김 호 승	18	
29	충 청 북 도 경 찰 청	청 장 김 학 관	17	
30	전 라 남 도 경 찰 청	청 장 모 상 묘	17	
31	경 상 북 도 경 찰 청	청 장 김 철 문	18	
32	제 주 경 찰 청	청 장 김 수 영	12	
33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회 장 김 상 훈	2	
34	새 마 을 운 동 중 앙 회	회 장 김 광 립	2	
35	한 국 자 유 총 연 맹	총 재 강 석 호	5	
36	한 국 지 방 행 정 연 구 원	원 장 주 재 복 원 권 한 대 행	1	
37	대 한 지 방 행 정 공 제 회	이 사 장 김 장 회	1	
38	한 국 지 방 재 정 공 제 회	이 사 장 이 인 재	1	
39	한 국 지 역 정 보 개 발 원	원 장 박 덕 수	1	
40	지 방 공 기 업 평 가 원	이 사 장 목 영 만	1	
41	한 국 섬 진 흥 원	원 장 양 영 환 원 권 한 대 행	1	
42	한 국 지 방 세 연 구 원	원 장 강 성 조	1	
43	경 찰 공 제 회	이 사 장 조 순 환 직 무 대 리	1	
44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 하 상 구	1	
45	한 국 소 방 안 전 원	원 장 이 상 규	1	
46	대 한 소 방 공 제 회	이 사 장 이 일	1	
47	소 방 산 업 공 제 조 합	이 사 장 옥 동 석	1	
48	한 국 소 방 시 설 협 회	회 장 박 현 석	1	
합	계		658	

나.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연 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불출석 일자	불출석 사유	비고
1	김보준	부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9.25.	부산경찰청	10.22.	공무상 일정	
2	오충익	부산경찰청 경비과장	9.25.	부산경찰청	10.22.	공무상 일정	
3	문봉균	부산경찰청 치안정보과장	9.25.	부산경찰청	10.22.	공무상 일정	
4	박정덕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장	9.25.	부산경찰청	10.22.	건강상 사유	
5	변석우	부산경찰청 교통과장	9.25.	부산경찰청	10.22.	공무상 일정	
6	김용승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실장	9.25.	광주광역시	10.22.	공무상 일정	
7	오덕관	울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	9.25.	울산경찰청	10.21.	모친상	
8	이정우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	9.25.	경상북도	10.17.	국외출장	
9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9.25.	행정안전부	10.25.	국외출장	
10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9.25.	경찰청	10.25.	공무상 일정	
11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	9.25.	소방청	10.25.	공무상 일정	

2. 일반증인 · 참고인

가. 일반증인 · 참고인 총괄

대상기관 (출석요구일)	출석요구 의결			불출석		
	증인	참고인	계	증인	참고인	계
행정안전부 (10.7.)	19인	—	19인	8인	—	8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10.)	5인	—	5인	5인	—	5인
진실화해위원회 (10.10.)	—	1인	1인	—	—	—
인사혁신처 (10.7.)	1인	—	1인	1인	—	1인
경찰청 (10.11.)	3인	2인	5인	—	—	—
소방청 (10.13.)	—	1인	1인	—	1인	1인
서울특별시 (10.15.)	6인	2인	8인	3인	—	3인
충청북도 (10.17.)	3인	—	3인	—	—	—
경기도 (10.14.)	—	1인	1인	—	—	—
서울경찰청 (10.15.)	12인	—	12인	3인	—	3인
부산경찰청 (10.22.)	2인	—	2인	—	—	—
광주경찰청 (10.22.)	2인	—	2인	—	—	—
울산경찰청 (10.21.)	2인	—	2인	—	—	—
경기남부경찰청 (10.14.)	3인	—	3인	—	—	—
경기북부경찰청 (10.14.)	2인	—	2인	—	—	—

대상기관 (출석요구일)	출석요구 의결			불출석		
	증인	참고인	계	증인	참고인	계
충청북도경찰청 (10.17.)	2인	—	2인	—	—	—
전라남도경찰청 (10.21.)	2인	—	2인	—	—	—
경상북도경찰청 (10.17.)	2인	—	2인	—	—	—
제주경찰청 (10.23.)	2인	—	2인	—	—	—
종합감사 (10.25.)	15인	1인	16인	10인	—	10인
총 계	83인	8인	91인	30인	1인	31인

※ 출석요구 철회 증인 : 행정안전부(10.7.) 8인, 소방청(10.10.) 2인, 경찰청(10.11.) 8인, 경기남부
경찰청(10.14.) 3인, 서울특별시(10.15.) 6인, 종합감사(10.25.) 6인

※ 출석요구 철회 참고인 : 소방청(10.10.) 1인, 서울특별시(10.15.) 2인, 종합감사(10.25.) 1인

나. 일반증인 · 참고인 출석 현황

【출석 증인】

연 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일자	신문요지	비고
1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9.25.	행정안전부	10.7.	새마을금고 운영실태 관련	
2	이용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9.25.	서울경찰청	10.15.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3	김원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9.25.	서울경찰청	10.15.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4	김철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9.25.	부산경찰청	10.22.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5	김성식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부산경찰청	10.22.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6	안진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9.25.	광주경찰청	10.22.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7	전준호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광주경찰청	10.22.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8	김재홍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9.25.	울산경찰청	10.21.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9	정병희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울산경찰청	10.21.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0	강경량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장	9.25.	경기남부 경찰청	10.14.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1	이상로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경기남부 경찰청	10.14.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2	김정연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장	9.25.	경기북부 경찰청	10.14.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3	이경자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경기북부 경찰청	10.14.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4	이광숙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장	9.25.	충청북도 경찰청	10.17.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일자	신문요지	비고
15	남성현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충청북도 경찰청	10.17.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6	정순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	9.25.	전라남도 경찰청	10.21.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7	정경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전라남도 경찰청	10.21.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8	손순혁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장	9.25.	경상북도 경찰청	10.17.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9	배성훈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경상북도 경찰청	10.17.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20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9.25.	제주경찰청	10.23.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21	김학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제주경찰청	10.23.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22	권선필	목원대 교수	9.25.	행정안전부	10.7.	특별재난지역 및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23	윤원석	인천경제 자유구역청장	9.25.	행정안전부	10.7.	2020년 이후 매년 3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국스탠포드 센터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감독권한 및 기능에 대한 점검	
24	김종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9.25.	행정안전부	10.7.	2020년 이후 매년 3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국스탠포드 센터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감독권한 및 기능에 대한 점검	
25	허만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장	9.25.	행정안전부	10.7.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진행 경과, 원활한 진상규명 및 유족, 희생자 결정을 위한 대책 등	
26	배택휴	여수·순천 10·19사건 지원 단장	9.25.	행정안전부	10.7.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진행 경과, 원활한 진상규명 및 유족, 희생자 결정을 위한 대책 등	
27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9.25.	행정안전부	10.7.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28	박종현	행정안전부 청사시설기획관	9.25.	행정안전부	10.7.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연 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일자	신문요지	비고
29	김교열	행정안전부 관리총괄과장	9.25.	행정안전부	10.7.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30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9.25.	행정안전부	10.7.	계엄의혹 관련	
31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9.25.	행정안전부	10.7.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 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 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인 전국재해구호협 회의 부실운영	
32	최동식	서울경찰청 제5기동대 경위	9.25.	경찰청	10.11.	특정인에 대한 인사 청탁	
33	노규호	前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9.25.	경찰청	10.11.	법인카드 사적유용 부실수사 의혹	
34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9.25.	경찰청	10.11.	의사온라인 커뮤니티 명예훼손 관련	
35	변창범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장	10.7.	경기남부 경찰청	10.14.	화성동탄경찰서장으로 성추 행 사건 입건 취소 경위 확인	
36	배재류	가덕중공업 대표	10.7.	서울특별시	10.15.	서울시 수상택시 관련 질의	
37	정석우	이지스 자산운용 회사 대표	10.7.	서울특별시	10.15.	지역현안 관련	
38	김선직	(주)한강버스 대표	10.7.	서울특별시	10.15.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문 제점 점검	
39	백해룡	화곡지구대장	10.7.	서울경찰청	10.15.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 관 련	
40	윤태식	전 관세청장 한국평가정보 이사회 의장	10.7.	서울경찰청	10.15.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 관 련	
41	최○○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	10.7.	서울경찰청	10.15.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 관 련	
42	손○○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	10.7.	서울경찰청	10.15.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 관 련	
43	조○○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	10.7.	서울경찰청	10.15.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 관 련	
44	고○○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	10.7.	서울경찰청	10.15.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 관 련	
45	이○○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	10.7.	서울경찰청	10.15.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 관 련	
46	이범석	청주시장	10.7.	충청북도	10.17.	오송참사 진상규명	
47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	10.7.	충청북도	10.17.	오송참사 진상규명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일자	신문요지	비고
48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10.7.	충청북도	10.17.	의대정원 사전유출 문제 관련	
49	권준영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장	10.15.	종합감사	10.25.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50	황운보	(주)원담종합건설	10.15.	종합감사	10.25.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51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10.15.	종합감사	10.25.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인사 관련	
52	양의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10.15.	종합감사	10.25.	승강기 안전인증 및 안전부 품 관련 질의	
53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10.15.	종합감사	10.25.	외유성 출장 및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연구 표절 관련	

【출석 참고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일자	진술요지	비고
1	허경옥	진도유족회 회원	9.25.	진실화해위원회	10.10.	진도 군정에 의한 민간인희 생사건 진실규명 보류판정 관련	
2	이경숙	故 인천 스톡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9.25.	경찰청	10.11.	교제폭력, 스톡킹 등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 의 문제점 증언 등	
3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	9.25.	경찰청	10.11.	딥페이크 및 디지털성범죄 실태 관련 질의	
4	김영철	고투몰 실제 영업 하는 상인들 모임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10.7.	서울특별시	10.15.	서울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향후 해결 방안 등	
5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위원장	10.7.	서울특별시	10.15.	TBS 폐국 위기 점검	
6	김경일	파주시장	10.14.	경기도	10.14.	접경지역 오물풍선 피해 관 련 진술 청취	
7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10.15.	종합감사	10.25.	경찰직장협의회 의견 전달	

【불출석 증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출석요구 사유	대상기관	불출석 일자	불출석 사유	비고
1	김태영	21그램 대표	9.25.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행정안전부	10.7.	불출석사유서 미 제출	
			10.15.		종합감사	10.25.		
2	이승만	21그램 대표	9.25.	대통령실 불 법증축 관련	행정안전부	10.7.	불출석사유서 미 제출	
			10.15.		종합감사	10.25.		
3	황윤보	(주)원담종합건설 대표	9.25.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행정안전부	10.7.	해외 연수	
4	박정학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	9.25.	새마을금고 부정대출 관련	행정안전부	10.7.	세균성 식중독	
5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9.25.	음주운전 박주기 징계 처분 의혹	인사혁신처	10.7.	불출석사유서 미 제출	
			10.15.		종합감사	10.25.		
6	김영선	前 국회의원	9.25.	대통령실 선 거개입 의혹 관련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0.10.	수사 진행중인 사안	
			10.15.		종합감사	10.25.	불출석사유서 미 제출	
7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9.25.	대통령실 선 거개입 의혹 관련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0.10.	수사 진행중인 사안	
			10.15.		종합감사	10.25.	무릎·관절 질환	
8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9.25.	대통령실 선 거개입 의혹 관련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0.10.	수사 진행중인 사안	
9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9.25.	대통령실 선 거개입 의혹 관련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0.10.	기존 취재 일정	
10	강혜경	前 김영선의원 회계책임자	9.25.	대통령실 선 거개입 의혹 관련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0.10.	증거자료 준비기 간 필요	
11	권준영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장	10.7.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행정안전부	10.7.	증인 출석을 위 한 준비기간 필 요	
12	이영인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장	10.7.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행정안전부	10.7.	갑작스러운 증인 출석요청에 따른 부담감	
13	박동진	(주)이크루즈 대표	10.7.	그레이트 한 강 프로젝트 문제점 점검	서울특별시	10.15.	민관 합동 해외 공무 출장	

연 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출석요구 사유	대상기관	불출석 일자	불출석 사유	비고
14	김정열	(주)은성중공업 대표	10.7.	그레이트 한 강 프로젝트 문제점 점검	서울특별시	10.15.	법인 매각 협상 관련 제주도 출 장	
15	박희영	용산구청장	10.7.	이태원 참사 책임 질의	서울특별시	10.15.	낙상으로 인한 요추 골절 및 재 판이 진행중인 사항	
16	윤정근	양천경찰서장	10.7.	방송통신심의 위원장의 이 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건 수사미진 사 유 확인	서울경찰청	10.15.	수사 진행중인 사안	
17	고석길	마포경찰서장	10.7.	이단 신교들 의 무차별적 고소, 고발, 수사방해에 대한 질의	서울경찰청	10.15.	수사 진행중인 사안	
18	최세윤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	10.7.	세관 마약수 사 무마의혹 관련	서울경찰청	10.15.	수사 진행중인 사안	
19	유경옥	대통령실 행정관	10.15.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종합감사	10.25.	대통령 내외 경호 관련 사항	
20	정지원	대통령실 행정관	10.15.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종합감사	10.25.	대통령 내외 경호 관련 사항	
21	김량영	-	10.15.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종합감사	10.25.	불출석사유서 미 제출	
22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사장	10.15.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인사 관련	종합감사	10.25.	공무 해외출장 (베트남총회 주 재)	
23	황효진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 부시장	10.15.	E4 호텔 매각 외압행사 관련	종합감사	10.25.	공무 해외출장 (세계 도시의 날 행사)	

다. 일반증인 · 참고인 철회 현황

【철회 증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 요구 결 일자	대상 기관	출석 요구 일자	출석 요구 철회 일자	출석요구 사 유	철회 사유
1	김영섭	(주)KT 대표이사	9.25.	행정안전부	10.7.	10.6.	정부 행정정보망사 업 장애 및 부실	여야 합의
2	이상국	(주)KTDS 대표이사	9.25.	행정안전부	10.7.	10.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 관련 비위행위	여야 합의
3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 국장	9.25.	행정안전부	10.7.	10.6.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부실 관련	여야 합의
4	손동신	감사원 행정안전1과장	9.25.	행정안전부	10.7.	10.6.	대통령실 불법증축 관련	여야 합의
5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	9.25.	행정안전부	10.7.	10.6.	잡코리아 회원 개인 정보 판매 문제	여야 합의
6	안정식	엠캐피탈 대표이사	9.25.	행정안전부	10.7.	10.6.	새마을금고 관련	여야 합의
7	이정환	SK렌터카 대표이사	9.25.	행정안전부	10.7.	10.6.	장기렌터카의 불합 리한 세제 혜택에 따른 지방세 탈세 의혹	여야 합의
8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이사	9.25.	행정안전부	10.7.	10.6.	장기렌터카의 불합 리한 세제 혜택에 따른 지방세 탈세 의혹	여야 합의
9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	9.25.	소방청	10.10.	10.9.	배터리 화재 관련	여야 합의
10	이용진	119특수구조단 특검수단 구조대장	9.25.	소방청	10.10.	10.9.	김건희 여사 현장시 찰 관련 지시사항 확인	여야 합의
11	장재훈	(주)현대자동차 대표이사	9.25.	경찰청	10.11.	10.10.	경찰 순찰차 납품 관련	여야 합의
12	백해룡	화곡지구대장	9.25.	경찰청	10.11.	10.10.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 관련	여야 합의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 요구 의결 일자	대상 기관	출석 요구 일자	출석 요구 철회 일자	출석요구 사 유	철회 사유
13	최세윤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	9.25.	경찰청	10.11.	10.10.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 관련	여야 합의
14	윤태식	한국평가정보 이사회 의장	9.25.	경찰청	10.11.	10.10.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 관련	여야 합의
15	최○○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	9.25.	경찰청	10.11.	10.10.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 관련	여야 합의
16	손○○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	9.25.	경찰청	10.11.	10.10.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 관련	여야 합의
17	조○○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	9.25.	경찰청	10.11.	10.10.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 관련	여야 합의
18	고○○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	9.25.	경찰청	10.11.	10.10.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 관련	여야 합의
19	김종길	용인동부 경찰서장	10.7.	경기남부 경찰청	10.14.	10.13.	피의사실 유포 및 미체포 피의자 수감 착용 관련	여야 합의
20	전재오	용인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감	10.7.	경기남부 경찰청	10.14.	10.13.	피의사실 유포 및 미체포 피의자 수감 착용 관련	여야 합의
21	유창준	용인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10.7.	경기남부 경찰청	10.14.	10.13.	피의사실 유포 및 미체포 피의자 수감 착용 관련	여야 합의
22	김영창	우진산전 대표이사	10.7.	서울특별시	10.15.	10.14.	지하철 납품지연 및 증차관련 질의	여야 합의
23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이사	10.7.	서울특별시	10.15.	10.14.	지하철 납품지연 및 증차관련 질의	여야 합의
24	박노황	TBS 이사장	10.7.	서울특별시	10.15.	10.14.	TBS 폐국 위기 점검	여야 합의
25	이강택	前 TBS 대표	10.7.	서울특별시	10.15.	10.14.	TBS 폐국 위기 점검	여야 합의
26	정태익	前 TBS 대표	10.7.	서울특별시	10.15.	10.14.	TBS 폐국 위기 점검	여야 합의
27	고민석	前 TBS 전략기획실장	10.7.	서울특별시	10.15.	10.14.	TBS 폐국 위기 점검	여야 합의
28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10.15.	종합감사	10.25.	10.24.	탄소섬유 국산화 수 사관련	여야 합의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 요구의결 일자	대상 기관	출석 요구 일자	출석 요구 철회 일자	출석요구 사 유	철회 사유
29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10.15.	종합감사	10.25.	10.24.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여야 합의
30	이현옥	인사혁신처 과장	10.15.	종합감사	10.25.	10.24.	공무원 재해보상심 사 관련 검증	여야 합의
31	강점숙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장	10.15.	종합감사	10.25.	10.24.	공무원 재해보상심 사 관련 검증	여야 합의
32	박동진	(주)이크루즈 대표	10.15.	종합감사	10.25.	10.24.	그레이트 한강 프로 젝트 문제점 점검	여야 합의
33	김정열	(주)은성중공업 대표	10.15.	종합감사	10.25.	10.24.	그레이트 한강 프로 젝트 문제점 점검	여야 합의

【철회 참고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 요구의결 일자	대상 기관	출석 요구 일자	출석 요구 철회 일자	출석요구 사 유	철회 사유
1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	9.25.	소방청	10.10.	10.09.	휴대폰 긴급전화 서 비스 문제	여야 합의
2	이정환	TBS노동조합 위원장	10.7.	서울특별시	10.15.	10.14.	TBS 폐국 위기 점 검	여야 합의
3	제시 린가드	FC서울	10.7.	서울특별시	10.15.	10.14.	서울시설공단의 상 암월드컵경기장 잔 디 관리 실태 관련	여야 합의
4	김범진	인포스 대표	10.15.	종합감사	10.25.	10.24.	치안장비 R&D 사업 관련	여야 합의